

에너지 산업 반부패 리포트

Report on Anti-corruption
in the Energy Industry



Business
Integrity
Society

목차

들어가며	5
제 1장. 에너지 산업 개요	
1. 에너지의 개념	7
2. 국내외 에너지 시장 현황	8
[Special Sectio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에너지	17
제 2장. 에너지 산업의 부패 리스크	
1. 부패의 정의	21
2. 에너지 분야 부패의 취약성	23
3. 에너지 분야 부패의 영향	25
4. 에너지 분야의 부패 유형	27
[Special Section] 그린워싱(Green Washing)과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	35
제 3장. 에너지 산업의 부패 이슈 대응	
1. 글로벌 정책 및 규제 동향	39
2. 주요국 에너지 산업 반부패 동향	48
3. 국내 에너지 산업 반부패 동향	55
제 4장. 기업 내 반부패 이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1. 부패 방지를 위한 통제 및 환경 조성	63
2. 부패 리스크 평가	66
3. 반부패 프로그램 이행	69
4. 반부패 프로그램 적용	74
5. 반부패 프로그램 모니터링	76
부록: Tools and Resources	77
참고 문헌	83



들어가며

부패는 시장경제의 왜곡을 낳을 뿐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비용을 증가시키며 거래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등 기업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패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투명성,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불평등 및 빈곤을 심화시키며,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일반 시민의 윤리 기준을 침식시키는 등 사회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된다.

어떤 산업도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에너지 부문은 특히 부패에 취약하다고 평가된다. 역사적으로 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부패 스캔들의 오명을 지고 있으며, 에너지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임에도 지속적인 가난과 저성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부패가 지적되기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다국가 관련 뇌물 사건의 5분의 1이 채굴산업에서 발생하며,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인 20%가량이 채굴산업¹과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산업 전반의 다양한 부패 리스크를 살펴보고,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법·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우리 기업의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한편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등 최신 아젠다를 둘러싼 반부패 담론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1 채굴산업(extractive industry): 광물, 석유, 가스 등의 자원을 탐사, 개발,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

제 1장. 에너지 산업 개요

1. 에너지의 개념
2. 국내외 에너지 시장 현황
[Special Sectio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에너지

1. 에너지의 개념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뜻하는 것으로, 전기·화학·위치·운동·열 등 많은 종류가 있다. 에너지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그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다. 산업 부문에서 통용되는 에너지 산업이란 에너지 자원을 공급하는 석탄, 석유, 가스, 전력 산업 등을 총칭하며 연료의 추출, 제조, 정제, 분배 등 에너지의 생산과 판매를 수반하는 산업 전반을 포괄한다.

에너지 산업이라는 용어는 석유파동을 겪은 후 에너지가 국가 경제 및 국방에 미치는 파급도가 크에 따라 과거와 달리 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체적으로 고찰하여 최선의 에너지 정책을 도출해 낼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등장한 용어로, 그 개념이 더욱 정립되어 가고 있다.

에너지는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로 구분된다. **1차 에너지(Primary Energy)**란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로서 최초의 에너지를 의미하며,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와 태양열, 지열, 조력, 파력, 풍력, 수력과 같은 자연 에너지, 원자력 등이 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이 오랜기간에 걸쳐 온도와 압력의 변화로 화석화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화석에너지라고 한다. 이들 연료는 땅이나 바다 속에 매장되어 있어 채굴하거나 채취해야 하며, 그 양은 한정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에너지이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풍력, 태양열, 지열 등은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여 재생에너지라고 한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의 에너지로 간주된다.

2차 에너지(Secondary Energy) 또는 최종 에너지(Final Energy)란 1차 에너지를 변형 또는 가공하여 우리 생활이나 산업 분야에서 다루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만든 것으로, 전기와 도시 가스, 석유 제품(휘발유, 경유 등), 석탄 가공제품(연탄, 코크스 등) 등을 지칭한다.

2. 국내외 에너지 시장 현황

1) 글로벌 에너지 리뷰: 2021²

세계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COVID-19 팬데믹으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억제되었지만, 여전히 중국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선진국의 에너지 사용량은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낮아진 반면, 세계 에너지 수요의 예상 증가량의 약 70%는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계 석탄 수요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을 넘어 정점이었던 2014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석탄 수요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반등하고 있는 반면, 세계 석탄수요 증가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화석연료 중에서 가장 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중동, 러시아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역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보다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력 수요는 10년이 넘는 기간 중 가장 빠른 성장을 하였고, 최종 에너지 수요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상으로 확고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코로나 시대의 성공 스토리로 여겨진다. 재생에너지 수요는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2020년에 3%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전력, 난방, 산업, 운송 등 모든 주요 부문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수요는 8% 이상(8,300TWh)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절대 수치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전년비 성장치다. 전 세계 전력 공급 증가량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재생에너지 성장의 3분의 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1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산업혁명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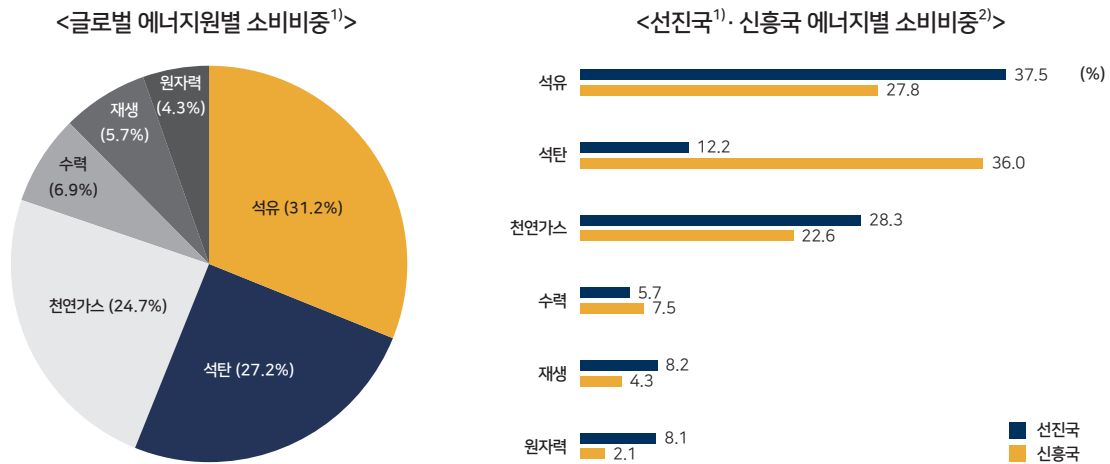


2 IEA (2021), Global Energy Review 2021

2) 도표로 보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현황³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에너지원별 소비(2020년 기준)를 살펴보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83.1%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선진국은 천연가스, 신흥국은 석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 1) 2020년 기준

2) 재생에너지(renewables)는 화석 연료와 수력, 원자력을 제외한 태양열, 풍력 등을 말함

자료: 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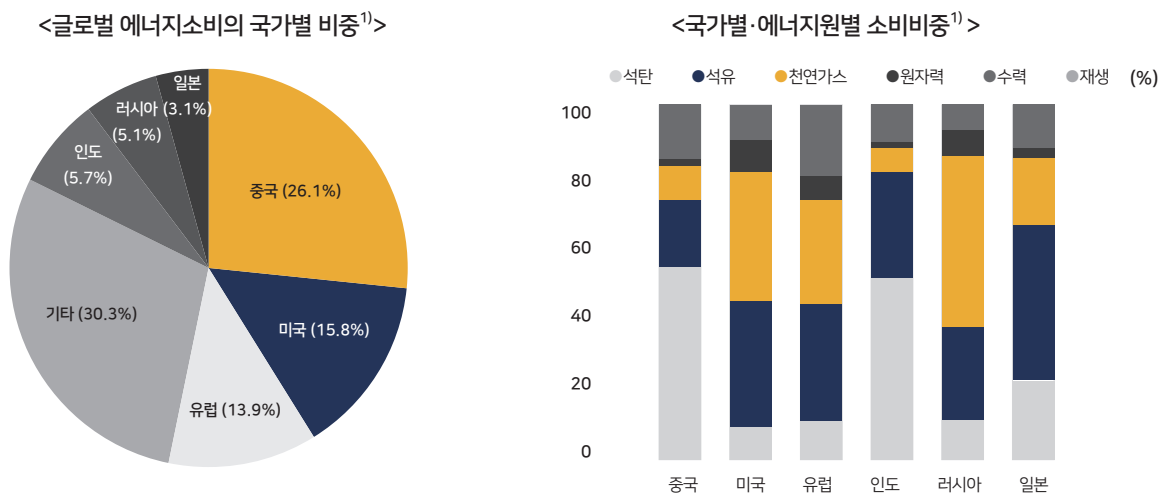
주: 1) IMF의 Advanced Economies 기준

2) 2020년 기준

자료: BP

[국가별 소비 비중]

글로벌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중국(26.1%)과 미국(15.8%), 유럽(13.9%)에서 소비되고 있다. 에너지원별 비중의 경우 중국과 인도는 석탄 의존도(각각 56.6[^], 54.8)가, 미국과 유럽은 석유 의존도(각각 37.1%, 33.8%)가 높다.



주: 1) 2020년 기준

자료: BP

주: 1) 2020년 기준

자료: 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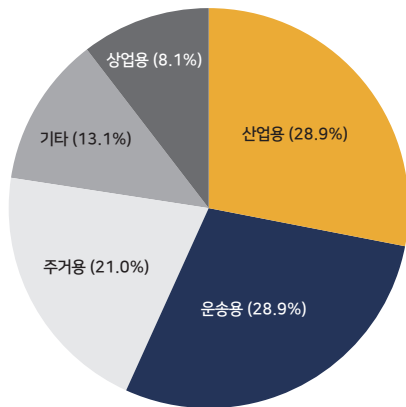
3 한국은행,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최근 상황 점검, 국제경제리뷰 2021-26,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1-44호.

-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28/view.do?nttId=10067538&menuNo=200434&pageIndex=1>.

[용도별 소비 비중]

에너지 소비(2019년 기준)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산업용(28.9%)과 운송용(28.9%), 주거용(21.0%)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선진국의 경우 운송용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3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신흥국은 산업용 에너지 소비가 전체의 3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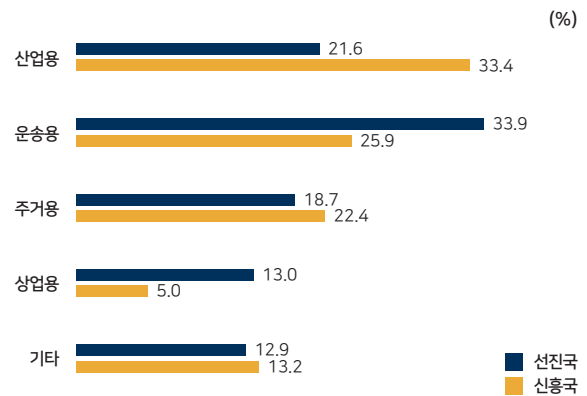
<글로벌 에너지소비의 용도별 비중¹⁾>



주: 1) 2019년 기준

자료: IEA

<선진국¹⁾· 신흥국 에너지소비 용도별 비중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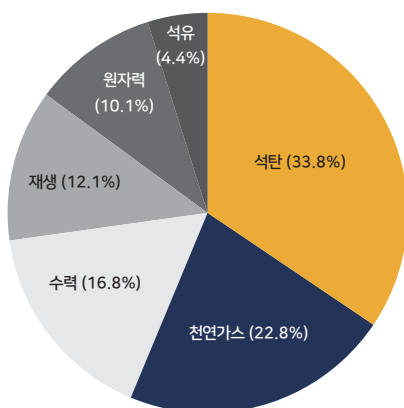
주: 1) OECD 회원국 기준
2) 2019년 기준

자료: IEA

[전력 생산의 에너지원별 비중]

전력 생산에서는 석탄(33.8%), 천연가스(22.8%), 수력(16.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선진국은 천연가스(30.0%), 원자력(18.7%), 석탄(18.2%) 순이었으나 신흥국의 경우 석탄(43.2%), 수력(18.9%), 천연가스(18.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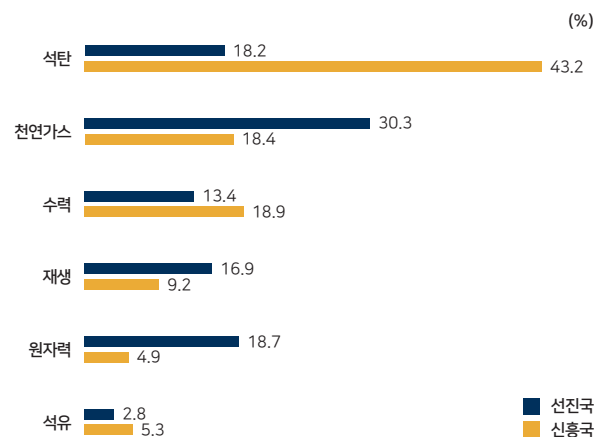
<글로벌 전력생산의 에너지원별 비중¹⁾>



주: 1) 2020년 기준

자료: Our World in Date

<선진국¹⁾· 신흥국 전력생산의 에너지원별 비중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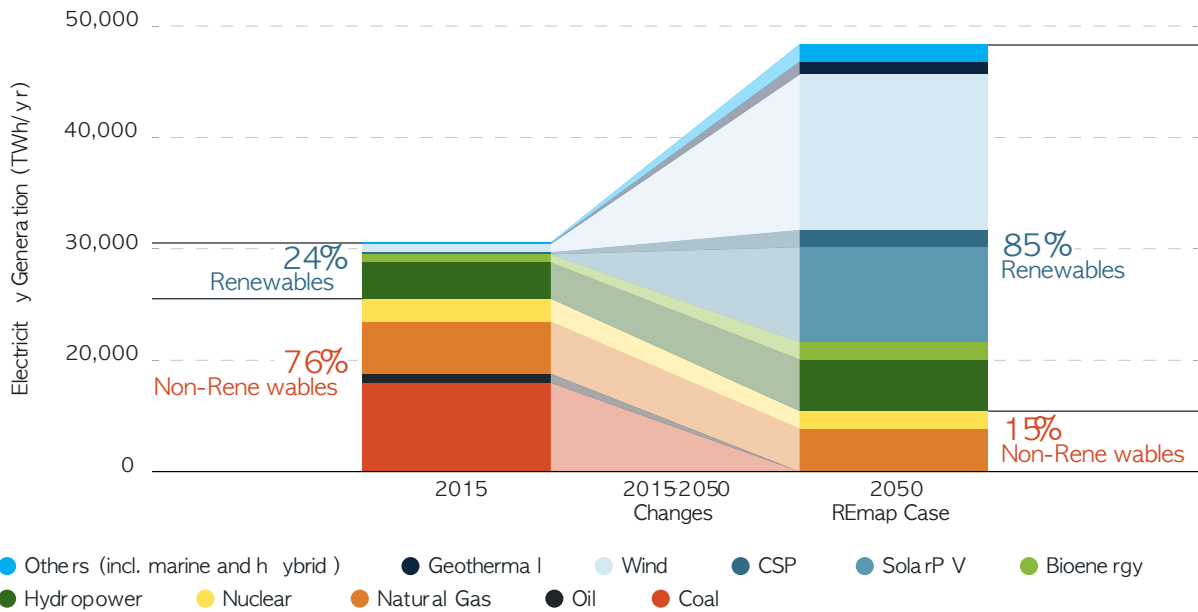
주: 1) IMF의 Advanced Economies 기준
2) 2020년 기준

자료: Our World in Date

3)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세계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전기 자동차는 역대 최고 판매기록을 세웠다. 그간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기술 혁신에 힘입어 전기가 에너지 소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청정하며 다양한 에너지원간 상호 연계성이 강화된 새로운 에너지 경제가 출현하고 있다.

<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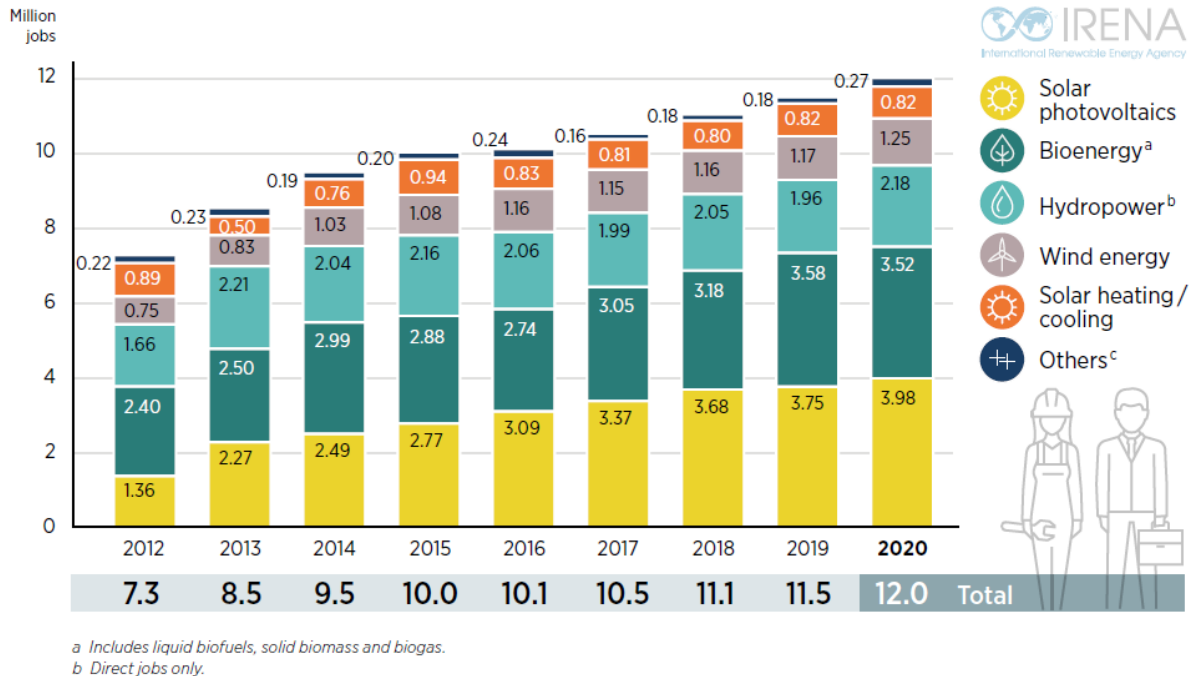
Source: Innovation landscape for a renewable-powered future: Solutions to integrate variable renewables, IRENA, 2019.

출처: ESMAP(2021).

“에너지 전환이 경제적 전환을 주도할 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출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다.”
 - Francesco La Camer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사무총장

“들이 없어서 석기 시대가 종료된 것이 아니듯, 석유 시대도 석유가 고갈되기 전에 끝날 것이다.”
 - Ahmed Zaki Yamani, 前 OPEC 사무총장

<재생에너지 기술별 글로벌 고용 현황 (2012-2020) >



출처: IRENA and ILO (2021).

공정한 전환 (Just Transition)?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이란 녹색경제로 전환할 때의 실질적인 이점이 널리 공유되도록 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사람들(국가, 지역, 산업, 커뮤니티, 근로자 또는 소비자)을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공정한 전환은 주로 환경적 고려 사항을 기반으로 하지만 세계화, 노동 절감 기술 및 서비스로의 전환과 같이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도 제기된다. 또한 정당한 전환은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4개와 연결되며, 특히 SDG 12번(기후 조치), 10번(불평등 감소), 8번(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 성장), 7번(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를 통합하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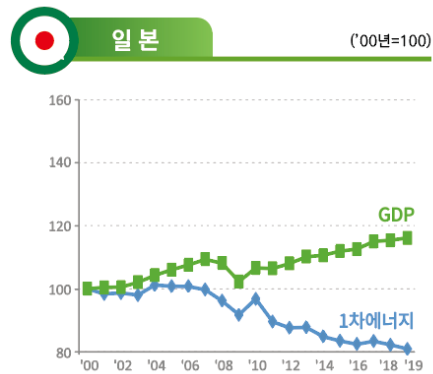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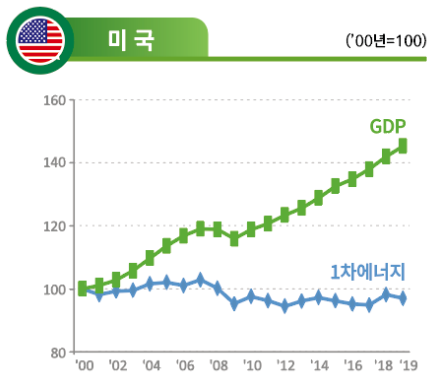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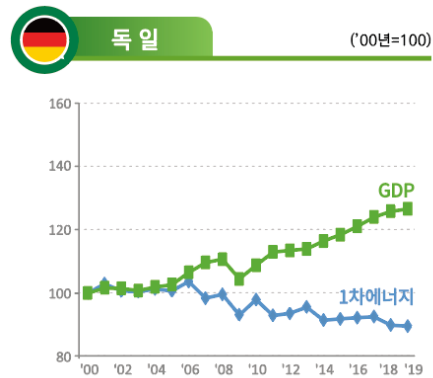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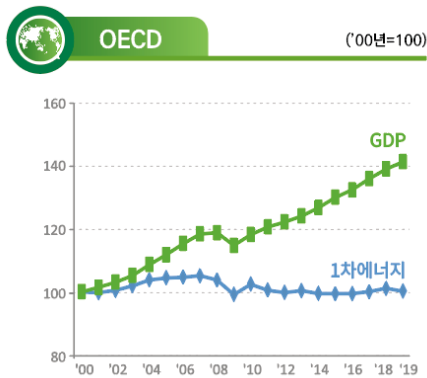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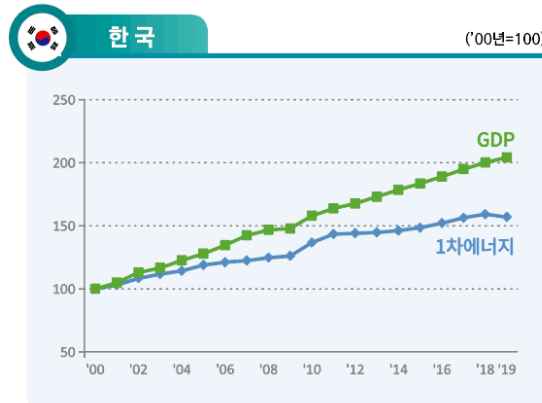
공정한 전환은 국가가 채택한 많은 국제협약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파리 협정은 "개별 국가의 발전 우선순위에 따른 노동력의 공정한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근로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수반하는 도전과제를 인식하고, 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포함한 모든 전환은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 걸친 비용과 이익에 대한 '분배의 정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전환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부패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출처: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n.d.); ACE SOAS Consortium (n.d.)

4) 국내 에너지 시장의 특징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관련 국제 위상(2018년 기준)을 살펴보면 1차 에너지 공급 기준으로는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석유 소비와 전력 소비 기준으로는 각각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다⁴.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에너지 소비가 경제 성장을 추종(Coupling)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GDP의 증가에도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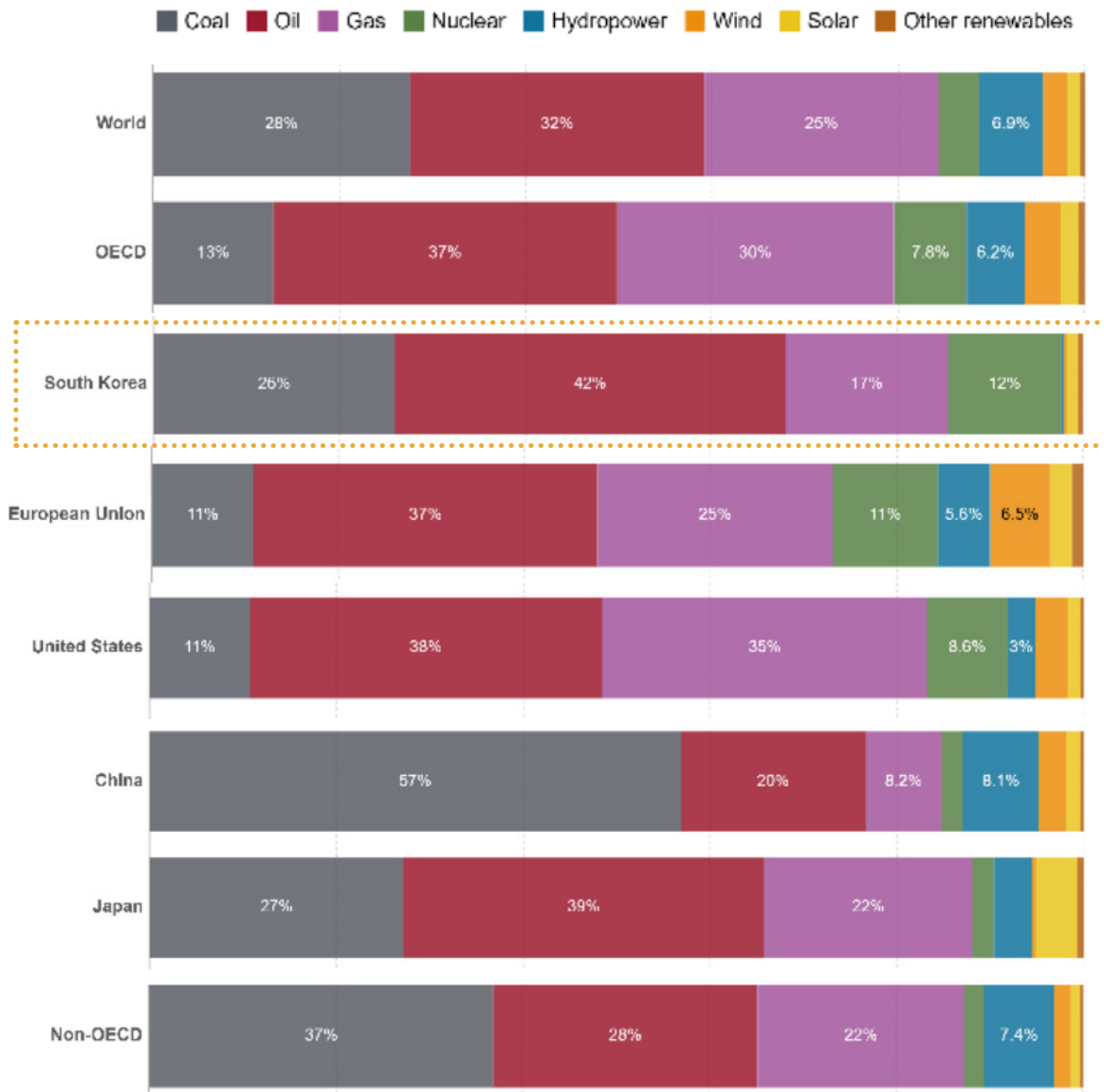


출처: 한국에너지공단(2021)

4 한국에너지공단, 2021 에너지 첫걸음 (2021).

우리나라 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등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 에너지원인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⁵. 그러나 현재의 에너지 소비원별 비중을 살펴볼 때, 한국은 세계 시장 대비 석유 및 원자력의 의존도가 높은 반면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낮은 특징이 있다. OECD 국가 대비 석탄, 석유, 원자력의 비중이 높고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낮다.

<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소비 비중(2020)>



Source: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BP (2021)

OurWorldInData.org/energy • CC BY

출처: Our World in Data 웹사이트: ourworldindata.org;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5 정책위키, "에너지전환정책", 2020.03.11, 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795.)

세계에너지기구(IEA) - 2021 글로벌 에너지 리뷰: 주요 발견사항 (Key Findings)



■ COVID-19 팬데믹은 계속해서 전 세계 에너지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대유행의 세 번째 물결은 이동 제한을 연장하고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계속 억제하고 있다.

■ 신흥 시장은 에너지 수요를 2019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 전 세계 에너지 수요는 2021년에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0년의 4% 감소를 상쇄하고 수요를 2019년 수준보다 0.5% 증가시키는 것이다. 세계 에너지 수요의 예상 증가량의 거의 70%는 신흥 시장과 개발 도상국에서 발생하며, 선진국의 에너지 사용량은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3%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은 역대 두 번째로 큰 연간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 모든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는 2021년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 수요만 해도 모든 재생 에너지를 합한 것보다 60%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거의 5% 또는 1,500 Mt의 배출량 증가를 수반한다. 2020년에 80%의 감축을 보였던 결과를 뒤집으며 배출량은 2019년 배출량 수준보다 1.2%(또는 400Mt) 감소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 2021년 세계 석탄 수요는 2019년 수준을 넘어, 정점이었던 2014년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 석탄 수요는 2021년에 4.5% 증가할 것이며 성장의 80% 이상이 아시아에 집중될 것이다. 중국만 해도 세계 성장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석탄 수요도 반등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화석연료 중에서 천연가스는 2019년 수준에 비해 가장 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천연 가스 수요는 아시아, 중동 및 러시아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21년에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글로벌 수요가 2019년 수준보다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시장인 미국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천연 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연간 수요 증가 수준이 20% 미만일 것이다.

■ 전력 수요는 10년 이상 만에 가장 빠른 성장을 향하고 있다.

- 전력 수요는 2021년에 4.5% 또는 1,000TWh 이상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2020년의 감소보다 거의 5배나 큰 것으로, 최종 에너지 수요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고히 하고 있다. 2021년에 예상되는 수요 증가의 거의 80%는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며, 중국은 세계 성장의 절반을 차지한다. 선진국의 수요는 2019년 수준 이하로 유지된다.

■ 재생에너지는 코로나 시대의 성공 스토리로 남아 있다.

-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2020년에 3%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전력, 난방, 산업 및 운송과 같은 모든 주요 부문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8% 이상(8,300TWh) 증가할 예정으로, 이는 절대적인 수치 상으로 가장 큰 전년 대비 성장이다.

■ 재생에너지는 2021년 전 세계 전력 공급 증가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예정이다.

- 태양광과 풍력은 재생에너지 성장의 3분의 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에 거의 3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산업 혁명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점유율이다. 풍력은 2020년 대비 275 TWh 또는 약 17% 증가하면서 재생가능발전 중 가장 큰 증가를 기록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량은 2021년에 145 TWh 또는 약 18% 증가하여 1,000 TWh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IEA (2021)/UNGC 한국협회 발체 번역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에너지

[지속가능발전목표 7번: 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발전목표 7번(SDG 7)은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수립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로, 모두를 위해 적정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다음의 5개 세부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SDG7 세부 목표	지표	관리 기구
7.1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	7.1.1 전기 접근성이 있는 인구 비율	세계은행(WB)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세계보건기구(WHO)
7.2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7.2.1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유엔통계국(UNSD)
7.3 에너지 효율 향상	7.3.1 1차 에너지와 GDP로 측정되는 에너지 집약도	국제에너지기구(IEA), 유엔통계국(UNSD)
7.a 청정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투자 촉진	7.a.1 개도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연구 개발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자금 흐름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7.b 개도국 에너지 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대	7.b.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출처: World Bank ESMAP 웹사이트: trackingsdg7.esmap.org/about-us; 대한민국 통계청 웹사이트: kostat-sdg-kor.github.io.

지난 10년 동안 전기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었고 전기 부문에서 재생 에너지 사용이 증가했으며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기가 없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깨끗한 요리 연료와 기술이 부족하다. 에너지 접근 보장의 진전은 지역에 따라 고르지 않아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훨씬 더 뒤쳐져 있다.

COVID-19 대유행은 진행 상황을 역전시키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유가 및 가스 가격의 하락은 청정 에너지 기술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낮은 화석 연료 가격은 정부가 화석 연료 보조금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안된 계획들은 청정 에너지 기술을 확대할 수 있다.⁶

6 출처: 유엔통계국,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1(<https://unstats.un.org/sdgs/report/2021/goal-07/>)

<SDG 7번 주요 성과 (2010년 대비)>

2010		Latest Data
1.2 billion people without access to electricity		759 million people without access to electricity (2019)
3 billion people without access to clean cooking		2.6 billion people without access to clean cooking (2019)
16.4% share of total final energy consumption from renewables		17.1% share of total final energy consumption from renewables (2018)
5.6 MJ/USD primary energy intensity		4.8 MJ/USD primary energy intensity (2018)
10.6 USD billion international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in support of clean energy		14 USD billion international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in support of clean energy (2018)



출처: IEA et al.(2021)

[COVID-19과 SDG 7⁷]

혁신적인 정책과 기술이 에너지 부문에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지만, COVID-19 전염병의 영향으로 전 세계는 2020년 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의, 그리고 향후 계획된 정책 하에서 세계는 SDG 7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일부 목표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최근 아프리카의 에너지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전기를 이용할 수 없는 인구의 수는 지난 6년 동안 감소하다가 2020년에는 증가했다. 한편, 기본적인 전기 서비스는 가격 상승으로 이제 3천만 명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용하기 어려워졌다.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대출할 때의 리스크에 대해 점점 더 인지하게 되면서, 에너지 기술 및 에너지 접근을 위한 부채 자금을 조달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세계에너지기구(IEA)의 정책 시나리오에 따르면, COVID-19의 경제적 여파로 인해 정부 및 기타 기관이 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 2030년에는 6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기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며(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위치), 전 세계적으로 약 24억 명이 깨끗한 식사가 어려워질 것이다. UN의 203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COVID-19 회복 계획 및 프로그램의 중심에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형 민간 태양열 부문을 지원하고 발전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행동 기반의 목표 설정 조치 등이 필요하다. 재정이 유한하기 때문에,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는 스마트해야 하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바로 시작 가능해야 한다. 분산형 에너지 솔루션은 특히 그리드에서 멀리 떨어진 가구에 도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SDG 7 달성에 COVID-19 팬데믹이 미치는 영향은 접근성 차원을 넘어선다. 낮은 유가 및 가스 가격은 최종 소비를 위한 청정 에너지 기술의 활용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 내 에너지 효율 조정에 대한 투자 회수기간은 화석연료 가격이 낮아질수록 길다. 일부 부문에서는 경제가 쇠퇴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자본 회전이 느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비효율적인 자본이 더 오래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팬데믹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침으로써 낮은 대출 금리가 더 오랫동안 유지된다면, 자본 집약적인 청정 에너지 기술의 확대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경제 성장 촉진, 근로자 보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안된 경제회복 계획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 낮은 화석 연료 가격은 정부의 화석 연료 보조금 개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SDG 7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 일부는, 정부가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회복 패키지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7 ESMAP, Energy Sector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 (ESMAP) Annual Report 2021 (English), (Washington, D.C.: World Bank Group, 2021),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615511640189474271/Energy-Sector-Management-Assistance-Program-ESMAP-Annual-Report-2021>.

제 2장. 에너지 산업의 부패 리스크

1. 부패의 정의
 2. 에너지 분야 부패의 취약성
 3. 에너지 분야 부패의 영향
 4. 에너지 분야의 부패 유형
- [Special Section] 그린워싱(Green Washing)과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

1. 부패의 정의

부패는 하나로 통용될 수 있는 정의를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부정행위를 포괄한다.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은 하나의 정의로 인해 부패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패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부패에는 현금 혹은 그 밖의 가치물을 약속, 제의, 제공하는 경우(적극적 부패)와 현금 혹은 그 밖의 가치물을 요구, 수락, 수수하는 경우(소극적 부패)가 모두 해당된다. 아래는 부패에 대한 국제기구 및 국내법의 다양한 정의를 보여준다.

유엔 반부패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뇌물 수수, 횡령, 영향력에 의한 거래, 직권 남용, 부정 축재, 자금 세탁, 범죄행위의 은폐 및 사법 방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범죄

경제개발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공적 또는 사적 권한의 남용
- 거래에 대한 영향력 행사, 정치적 포획 및 간섭, 이해충돌, 국내외 공무원의 뇌물수수 뿐만 아니라 급행료, 직무상 부당취득, 사기, 자산의 횡령, 착복 또는 유용, 직권남용, 불법 이득, 민간부분에서의 뇌물, 민간부분의 자산 횡령, 부패로 인한 자산 은폐,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다양한 활동과 행위를 포괄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 사적 이익을 위한 수탁 권리의 남용

세계은행 (World Bank, WB)

- 부적절한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수락 또는 청탁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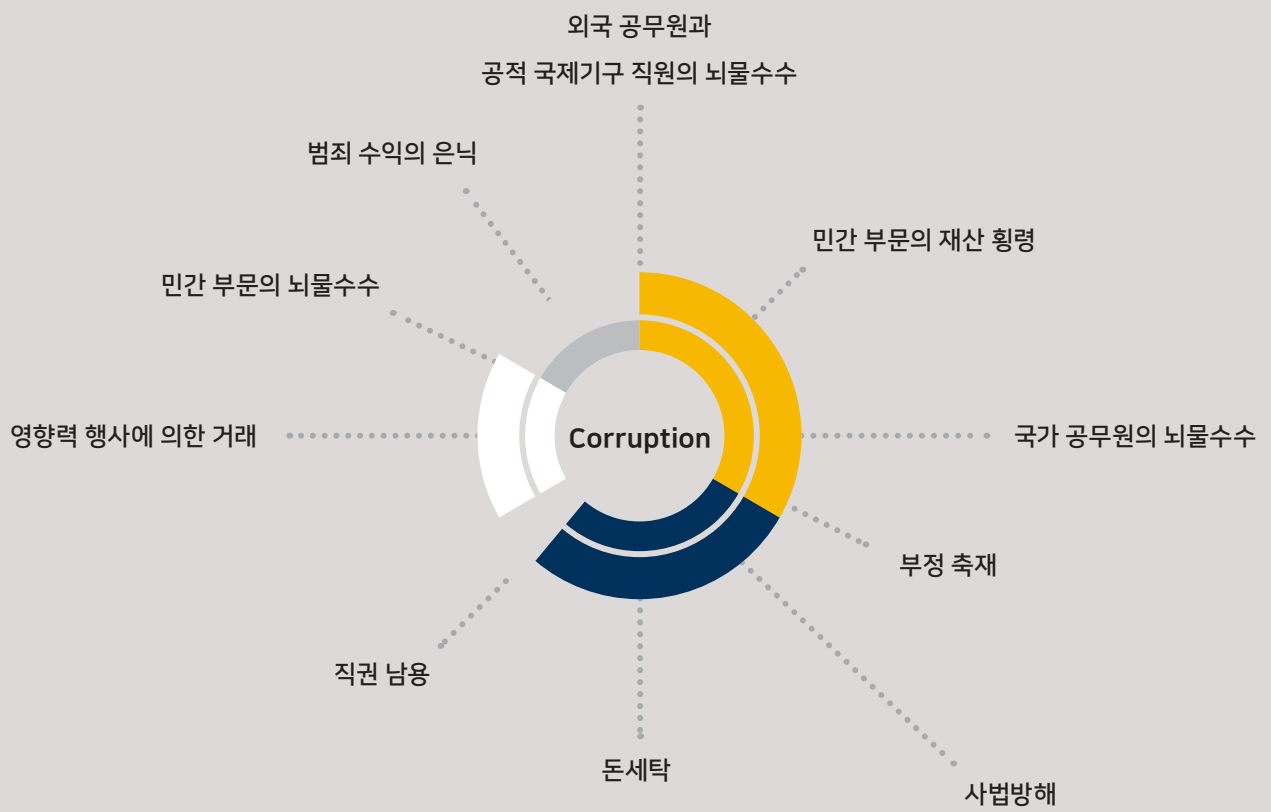
국제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 뇌물수수 및 강요, 부정청탁, 영향력 행사, 돈세탁 등의 부정행위를 포괄

우리나라 부패방지법 상 '부패방지'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상기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다양한 부패의 유형>



출처: UNGC 한국협회 정리

2. 에너지 분야의 부패 취약성

에너지 산업의 부패는 사회 전체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기간산업으로, 다른 공업에 연료를 공급하는 근원이 된다. 때문에 부패로 인한 비용이 에너지 가격에 전가될 경우, 다른 공업 전반의 원가 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결국 각종 재화 및 서비스의 최종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은 사회 전체에 동력을 공급하는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보면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이렇듯 에너지 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까지도 직접 연결된 중요한 산업으로, 반부패 노력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산업은 가장 부패에 취약한 산업 중 하나로 지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해외뇌물보고서(Foreign Bribery Report)⁸에 따르면 다국적 뇌물 사건의 5분의 1이 채굴산업에서 발생한다. 또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인 20%가량이 채굴산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천연자원거버넌스연구소(NRGI)⁹는 분석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은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규모가 막대하다. 또한 연관된 관계자 및 소유권 구조뿐만 아니라 산업 자체가 지닌 복잡성 때문에 부패 리스크에 특히 취약한 경향이 있다.



8 OECD, OECD Foreign Bribery Report: An Analysis of the Crime of Bribery of Foreign Bribery Officials, (Paris: OECD Publishing, 2014), <http://dx.doi.org/10.1787/9789264226616-en>.

9 NRGI, "Oil, Gas, Mining Remain Major Focus for FCPA Investigations", 2016.10.18, <https://resourcegovernance.org/blog/oil-gas-mining-remain-major-focus-fcpa-investigations>.

<에너지 산업의 부패 취약 원인>

■ 규모의 경제에 따른 진입장벽

- 에너지 산업은 모두 대규모의 시설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이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소수의 거대자본을 통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추구하게 만든다. 즉, 대규모 자본 없이 이 산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전제조건으로 인해 공정경쟁에 취약한 구조가 형성된다.

■ 기술적 특징으로 인한 경쟁 제약

- 에너지 산업에서는 고도로 기술적인 서비스 및 제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사업경험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부문 내 경쟁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폐쇄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부패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 막대한 수익 규모

- 에너지 산업의 계약은 주로 매우 큰 보상이 따르는 장기 계약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을 수주하게 될 경우 얻는 이익이 뇌물에 따른 리스크보다 크다고 판단할 경우, 뇌물 공여를 통한 계약 수주의 편을 선택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

■ 산업의 복잡성

- 에너지 산업은 제조업, 건설업, 발전/열공급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에 걸친 융복합적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리적 범위 역시 개별 지역 또는 국가를 넘어 다국가에 걸쳐 산업이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주인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에 노출되기 쉽다.

■ 정부 보조금의 존재

- 에너지 산업은 기본적인 공공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에 각종 정부 보조금이 존재한다. 사회적 자본이나 제도 기반이 약한 국가의 경우, 이러한 보조금이 남용되거나 특정 이익집단에 유리하도록 이용될 여지가 있다.보수적인 시장 개혁 의지에너지 산업은 그 전략적 중요성과 가격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차원으로 정부가 자유시장 개혁(liberal reform)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시장 내 자산이 종종 소수의 기업에 집중된 상태로 유지되고, 이로 인해 부패가 양산된다.

출처: OECD(2021), World Bank (2000), Rahman (2020), Sovacool(2021), 위키백과 등을 바탕으로 UNGC 한국협회 정리

3. 에너지 분야 부패의 영향¹⁰

에너지 분야의 부패로 인한 영향은 공공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심각한 수준이다. 공공 부문의 경우, 이란에서는 수십억 달러의 석유 수익이 정부 체제에 들어서면서 매년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앙골라에서는 국가 전체 수입의 1/3을 차지하는 최소 40억 달러 규모의 유실 자금이 규제당국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이는 추후 정부 관리에 대한 리베이트와 군용 무기 구매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1960년 이래로 3~4천억 달러의 석유 수익이 정부 관리에 의해 훔쳐지거나 잘못 사용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해당기간에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대한 서구의 원조 금액 규모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다른 평가에서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나이지리아의 전력 부문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금 160억 달러가 부패, 모호한 계약 체결, 불투명한 관료제로 낭비되었다고 계산했다. 유럽 연합(EU)에서도 농가 및 기업들이 환경 규제지침을 회피하기 위해 뇌물을 사용하는 동시에 수십억 유로 상당의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부문에서도 세계적인 부패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석유 회사 Elf Gabon이 석유국들을 지원하며 수익을 창출한 다음, 해당 자금을 통해 재선을 원하는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업체인 러시아의 Gazprom은 "부패와 비효율"에 매년 400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거의 연간 수익(약 460억 달러)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미국에서는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전기, 석유, 가스 및 석탄 회사를 대상으로 여타 부문보다 많은 수백 건의 부패 및 사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러한 혐의로 인해 20억 달러 이상의 벌금과 합의금이 부과되었다.

부패는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 프로젝트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패는 소비자에게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하며, 지역사회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기업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정부 예산에서 더 높은 비용을 치르게 하며,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



10 Benjamin K. Sovacool, "Clean, low-carbon but corrupt? Examining corruption risks and solutions for the renewable energy sector in Mexico, Malaysia, Kenya and South Africa", Energy Strategy Reviews, Volume 38 (2021): 100723.

<에너지 분야 이해관계자별 부패의 영향¹¹⁾>



에너지 소비자

- 높은 에너지 가격
- 비싸고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
- 환경, 건강, 안전에 대한 부정적 영향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 환경 및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
- 사회적 혜택 또는 외부편익 감소
- 빈곤 위험 증가
- 피해보상, 부정적 영향 완화 및 이익 공유를 위한 지역사회 기금 감소
- 기후 변화 완화 약속의 감소 및 기후변화 취약성 증가



에너지 회사

- 운영 상 효율성 저하
- 에너지 공급 비용 증가
-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및 환경부담금 증가
- 자기자본 비용을 포함한 이자 비용 및 차입비용 증가
- 서비스 확장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재정 자원 감소
-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연 및 비용증가
- 부채, 손실 및 파산 위험 확대



정부 기관 및 기관

- 에너지 부문의 비용 증가
- 대출/보증상환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지출 증가
- 사회 및 환경 정책 실행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 부정적인 환경 영향 및 건강 영향에 따른 완화 조치 필요성 확대
-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둔화
- 에너지 빈곤 및 기타 빈곤·취약계층 증가
- 사회적 긴장 및 정치적 불안정 리스크 확대



독립 전력 생산자,
에너지 부문의
민간 비즈니스 개발자

- 경쟁의 왜곡; 불공정 경쟁 및 효율 감소
- 입찰 지불금 및 기타 추가 비용/손실금 낭비
- 승인 취소에 따른 프로젝트 종료



금융 기관

- 리스크 증가 및 평판 위험 확대
- 대출 부담 증가
- 추가 비용 및 사기 청구 확대
-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문제
- 파산 및 금융 위기의 리스크

11 Jintao Lu et 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rruption: implications for the sustainable energy sector" Sustainability, Volume 11, Issue 15 (2019): 4128을 바탕으로 Sovacool(2021)에서 재구성.

4. 에너지 분야의 부패 유형

1) 에너지 부문이 직면하는 8가지 부패 리스크 유형¹²

부패는 국제 투자자들에게 세금 상승 요인으로, 기업인에게는 경영 관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부패는 자원보유국이 꼭 필요로 하는 재정적 수입(revenue)을 빼앗고 자원의 효율적인 할당과 배분을 저해한다.

Sovacool(2021)은 폭넓은 문헌조사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부문이 직면하는 부패 리스크를 8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장사항으로 부패 위험 매핑, 보조금 등록부 및 종료조항 마련, 투명성 이니셔티브, 부패방지법 및 기소 강화, 공유 소유권 모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부패 리스크의 8가지 유형>



출처: Sovacool(2021)

12 Sovacool, "Clean, low-carbon but corrupt?"

2) 채굴산업에서의 부패¹³

채굴 결정부터 수익원의 배분과 지출까지 이르는 채굴산업의 가치사슬 전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방법으로 131건의 부패를 분석한 OECD의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개 가치사슬을 바탕으로 채굴산업의 부패 구조, 부패 관련 당사자, 은폐 메커니즘, 부패 취약성 증가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채굴산업 가치사슬 6단계>

채굴 결정	채굴권 부여	채굴사업 운영 및 규제	수익 확보	수익 관리	수익 지출 및 사회 투자
비용편익 분석, 채굴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위험, 토지 사용, 환경보호, 문화적 유적지, 토착 주민과 지역사회 보호 등을 감안하여 채굴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직접적 계약 협상, 경쟁 입찰 등의 과정을 거쳐 정부가 광물, 석유, 가스에 대한 탐사 및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단계	실제 광물, 석유 등의 채굴 과정과 관련된재화와 서비스의 조달, 채굴 사업 관리 관련 안전, 환경에 관한 규제 조치가 일어나는 단계	정부의 세금, 수수료, 로열티 등을 징수하는 단계	확보된 수익을 천연자원기금, 저위험 투자펀드, 인프라 투자 펀드 등을 통해 관리하거나, 수익의 재배분을 위한 관리 계약의 이전 등의 단계	정부 공공지출, 사회적 지출, 공공조달, 직접적 현금지원 등 채굴산업 관련으로 확보된 수익의 실제 집행하는 단계

출처: OECD (2016)

[부패 구조 및 전반적 측면]

부패 사건은 채굴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다. 광산, 석유, 가스 채굴권을 부여하는 하는 과정, 사업운영 관련 제한 및 규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단계에서 각각 34건과 59건의 부패 사건이 일어났다. 나머지 26건의 부패사건은 수익 확보 단계에서 발생하였다. 부패 유형으로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횡령, 공공 기금의 오용과 사용처의 위법적 변경, 직권 남용, 거래시의 불법적 영향력 행사, 부당 취득, 급행료 뇌물 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부패 관련 당사자]

OECD의 분석에 따르면 광물, 석유, 가스 채굴권의 부여 단계, 재화와 서비스의 조달, 물품 거래, 천연자원기금(natural resources funds)을 통한 수익관리, 공공 지출 단계에서 고위 공무원과 관련된 대규모의 부패가 관찰되었다. 한편 하위직 공무원(세무 공무원, 관세 또는 이민 업무 종사자, 검사인)은 일반적으로 세관 업무, 이민 관련 규정, 조세 징수 등과 관련하여 부패와 연루되어 있었다.

정부소유 공기업의 부패 사건이 20%를 차지했는데, 정부소유 공기업은 특히 채굴권의 부여, 재화와 서비스 조달, 상품 거래, 사회적 지출과 화석연료 보조금의 관리와 같은 비상업적 분야에서 부패에 많이 노출되고 있었다. 중앙 및 지방직 공무원, 지역의 사업 파트너, 하위 계약자, 컨설턴트, 중개인, 외국기업은 부패 행위의 교사자 또는 수혜자로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상기 행위자들은 교사자 또는 수혜자로서의 영역과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고 상호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13 OECD의 'Corruption in the Extractive Value Chain'을 국문 요약한 산업통상자원부 박상희의 '채굴산업 가치사슬에서의 부패'를 바탕으로 발췌 인용 및 재구성함

[은폐 메커니즘]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적인 지급을 위한 복잡한 수단으로 위장된 역외 거래(12건), 페이퍼 컴퍼니를 포함한 층층적 기업구조 설계(21건)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패의 적발과 제재가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그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에 채굴권 계약을 부여하는 것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공공 자금 집행을 우회하는 통로 또는 거래의 실질 수혜자를 위한 뇌물 지급의 채널로서 사용되었다. 민간 기업 부문에서 페이퍼 컴퍼니는 자원보유국이 요구하는 자국산 부품 사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었다. 글로벌 에너지기업들은 자원보유국가에 대한 존중을 형식적으로라도 표시하는 차원에서 해당 국가의 대표 기업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불필요하지만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채굴권 결정 과정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뇌물 지급 사실을 은폐하거나 뇌물 범죄와의 연관성을 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리인, 컨설팅 회사, 합작회사 파트너, 자회사, 사업파트너, 법률가, 회계사 등의 중개기관과 같은 제3자들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49건)

[부패에 대한 취약성 증가 요인]

합작회사 또는 다른 사업 파트너의 선택, 현지 직원 채용, 재화와 서비스 조달을 위한 입찰 자격 사전심사 기준, 자국산 부품 사용의무 적용 등에서의 재량권은 부패 위험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경우 잘못 설계된 자국산 부품 사용의무 조항은 (부패와 관련성이 높은) 정치인이나 공무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하게 되는 부패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품 거래의 부패는 이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 수입의 유출과 이로 인한 정부 예산의 부정적 영향 이외에도 또 다른 분야에서의 부패위험을 야기하게 된다. 계약을 확보하기 위한 잘못된 가격 책정과 복잡하고 불법적인 리베이트 구조는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채굴산업 분야에서의 정교한 부패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정부 차원에서는 가부장적 후원(clientelism and patronage) 문화와 지역정부 공무원, 지역사회 지도자, 지역사회의 사업가 등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의해 부패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지역 정부에서의 부패는 지역 경제와 지역 주민의 역량에 대한 적절한 진단이 없이 성급하게 지방정부로 권한 이전이 된 것에서 기인한다. 아울러, 채굴권 관련 파생되는 책임과 재정적 수입의 관리에 대한 지방 정부 차원의 행정 능력이 아직 불비한 상태가 지방 정부 수준에서의 부패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부패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권고]

OECD는 채굴산업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차원적으로 접근할 경우 좋은 결과를 확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부패의 공급과 수요 측면, 국제 및 국내 측면, 그리고 민간과 공공 영역 등 모두를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각 분야들을 매우 세분화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대응과 국가간 연대를 강조한다. 부패 유형이 진화하면서 부패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혁신적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부패를 예방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실행과 규율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역동적이고 혁신적이며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부패 방지를 위한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원보유국 정부와 투자기업 본국 정부를 넘어서는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표준적인 진단 틀을 통해 채굴산업 가치사슬에서의 부패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정부와 기업들이 부패요인 완화 및 인센티브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동료평가 과정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3) 에너지원별 주요 부패 리스크¹⁴

한편 OECD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부문 개혁 프로젝트(2019-2021)의 일환으로 해당국 에너지 부문 부패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다양한 세부 에너지원별 부패 취약사항을 지적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원별 주요 부패 리스크: 우크라이나 사례를 바탕으로>

가스 부문

공공서비스 의무로 인해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서 다양한 횡령 및 시장조작을 야기한다.

석유 부문

석유를 관리하는 국영기업에서의 국정농단(state capture) 특히 독점적 지위의 남용 및 사익집단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취약하다.

석탄 부문

가장 공공조달과 연계성이 높은 부분으로, 국영기업의 가짜 구매(fake purchases) 또는 조달 대금의 과다 집행 등으로 인한 횡령이 자주 목격된다.

수력 부문

수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자금 횡령이 나타나기도 한다.

재생에너지 부문

재생에너지 생산 인센티브의 존재, 비효율적 정책,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부패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제도와 급변하는 기술이 결합되어 내생적인 부패 리스크가 양산될 수 있다.

14 OECD, Anti-Corruption Review of the Energy Sector in Ukraine (Highlights) (2021).

4) 공무 관여도에 따른 에너지 분야 부패 유형 구분¹⁵

세계은행(2000)은 에너지 부패로 초래되는 빈곤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부패에 대한 공무 관여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작은 부패 (Petty Corruption)	부패한 관리 관행 (Corrupt Management Practices)	거대 부패 (Grand Corruption)
개인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비조직적인 부패 행위로, 검침원이나 안전 검사원에 대한 뇌물 수수 등의 위법 행위	에너지 구매나 판매 계약, 채권과 관련하여 기업 관리자나 중간관료에게 뒷돈을 제공하는 등의 부패 행위	정치 캠페인에 대한 기부나 정치 지도자의 사익편취에 대한 반대급부로 독점적 이윤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에너지 분야의 '작은 부패 (Petty corruption)']

작은 부패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가장 만연하고 많은 개발도상국의 가스, 전기, 지역난방 회사에서 발생하는 낮은 대금 회수율의 원인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아제르바이잔의 국영 Baku Electricity Company는 1,000명의 검침기와 요금 징수원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하반기에 가계 요금 징수율이 12%라고 보고된 바 있다. 낮은 징수율로 인해 발전소가 연료가 부족하게 되어 소비자들은 반복된 정전을 경험해야 했고 사회적 분노를 야기하였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생산된 전력의 55%만 수익을 거두고 있다. 한 추정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전력 개발 위원회(BPDB)와 다카 전력 공급국(DES)의 전체 시스템 손실 중 약 절반이 전력 계량을 둘러싼 잘못된 관리와 '작은 부패'로 인해 발생한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방글라데시 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찰과 사법부 다음으로 전력공공기관 직원이 가장 부패한 공무원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작은 부패'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을 수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BPDB와 DES의 손실은 매년 1억 달러 이상에 달하며, 남아시아에서 이러한 '작은 부패'는 조직화된 곳도 있다. 부패한 노동자를 노동조합이 보호하고 정치인은 노동조합을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작은 부패'로 도난당한 수입이 노동조합, 나아가 정치계에 이르는 흐름을 보이기도 한다.



출처: Baku Energy Group 홈페이지

15 World Bank Group, The Cost of Corruption for the Poor – The Energy Sector, Public Policy for the Private Sector (Washington, DC: World Bank, 2000) / UNGC 한국협회 발췌 번역.

[에너지 분야의 '부패한 관리 관행 (Corrupt Management Practices)']

부패한 관리 관행에는 현금 거래와 비현금 거래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과거 소비에트 경제 시스템의 핵심 특징이었던 비현금 거래는 여전히 널리 퍼져 있으며, 인위적으로 부풀린 가격으로 전기(연료용)와 가스 및 석탄(전기 및 산업 생산용)을 교환하여 사적 이익을 만들어내는 관행이 존재한다. 또 다른 관행은 전력회사가 유통, 만기, 자격조건에 제한이 있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음은 즉시 시장에서 크게 할인되며 액면가의 아주 일부만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 유통 권한이 있는 전력회사 관리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어음 소유자로부터 뇌물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지의 석탄 산업이다. 개별 광산 관리자의 이익을 위해 기록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생산 및 판매되는 석탄은 지역 내 산업관계자, 철도 운송 시스템 및 항만 당국까지 관련된 광범위한 현상이었다. 이러한 모든 관행으로 인해 가스, 석탄 및 전력 회사의 비용이 20-30% 증가하고 반면에 수익은 비슷한 규모로 감소하여, 이미 불안정한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부정부패는 공급업체 간의 경쟁이 거의 또는 전혀 없고, 조달 물자에 대한 정가가 가변적이고, 평판 좋은 기업이 참여를 꺼리는 입찰에서 종종 발견된다. 경쟁 입찰 프로세스가 사용되는 경우일지라도, 유리한 입찰 사양, 조건, 평가 등을 위해 뒷돈이 지불될 수 있다. 또한 작업 지시서의 발행, 신용장 발행, 비용 지급, 허가 취득과 같이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뒷돈이 제공될 수 있다.

[에너지 분야의 '거대 부패 (Grand corruption)']

거대 부패는 이미 언급한 두 유형과 달리 거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알려진 예로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전 총리가 그와 그의 측근이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스 무역업자에게 개인적으로 독점권을 부여한 사례가 있다. 무역업자는 러시아에서 가스를 천 m3당 50달러에 수입하여 산업 소비자에게 80달러에 판매했다. 이러한 독점으로 얻은 재정적 부를 바탕으로 정당을 창설했던 총리가 해임되고 나서야 우크라이나의 가스 도매 시장이 자유화되었다. 해당 가스 무역업자는 대부분의 고객을 빠르게 잃었지만, 러시아 가스회사 RAO Gazprom에 가스를 받고 지불하지 않아 수억 달러의 빚을 졌기 때문에 아직 거래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RAO Gazprom은 민간 상인의 특권이 내각 결의에 의해 부여되었다고 주장하며 미납된 가스 요금에 대한 책임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이전하였다. 일시적인 가스 시장 자유화에 따라 또 다른 민간 가스 무역 회사의 소유주가 새로 설립된 수직 통합 국영 석유 및 가스 회사(Naftogaz)의 대표로 임명되었고 러시아에서 수입한 가스를 우크라이나의 300대 산업기업에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고위직을 남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의 예는 러시아 석탄 부문에서 찾을 수 있다. 1994년 기준, 러시아 GDP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 부문에 대한 직접 보조금으로 약 28억 달러가 지출되었는데 1997년 말까지 이러한 보조금의 통제는 국가 석탄 독점기업인 RosUgol의 특권이었다. 이러한 보조금 예산의 할당, 분배 및 사용은 매우 불투명했으며 효과적인 모니터링 장치가 없었다. 결국 1996-97년에 실시된 석탄 보조금에 대한 감사 결과, 상당 금액이 잘못된 수혜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아 정부는 석탄 부문 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광범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했다.

[Case Study] - BP (영국)



2021년 9월 BP가 나이지리아에서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뇌물을 수수한 일에 대해 우려를 표한 자사 석유 트레이더 자렘보크(Zarembok)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렘보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BP 실무자는 “2018년은 (나이지리아에서) 선거 준비 기간이고, 그게 무얼 뜻하는지 모두 알 것이다. 모른다면 직접 만나서 설명해주겠다.”라는 메일을 보냈고, 이것은 뇌물 수수에 대한 압박이 있다는 “확연한 레드 플래그”였다. BP는 나이지리아 에이전트에게 다른 나라 에이전트에 비해 10배 높은 비용을 제공한 바 있다.¹⁶ 한편 2021년 12월에는 BP가 세네갈 석유 계약에서 부패에 대한 “레드 플래그”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계약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¹⁷ 많은 해외 에너지 산업 부패 사례에 연루되어 있다.¹⁸

16 Bloomberg, “BP Oil Trader Says He Was Fired Over Nigeria Bribe Concerns”, 2021.09.20. ; Aljazeera, “Suit claims BP trader sacked for raising Nigeria bribe concerns”, 2021.09.20.

17 Transparency International, “Transparency International Calls for Foreign Bribery Investigations into Senegal’s Lucrative Oil Deals”, 2021.12.02.

18 The Telegraph, “Whistleblower reveals BP link with international network of Corruption”, 2021.06.05. ; OCCPR, “BP Turned a ‘Blind Eye’ to Corruption in Prize Azerbaijan Gas Project”, 2022.01.31.

5) 재생에너지 부문의 부패 리스크¹⁹

재생에너지 부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기존 채굴 부문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산업은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는 많은 부패 리스크를 내포하게 된다. 정부의 보조금과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행 등에 얽힌 지대추구행위 역시 주요한 부패 리스크로 지적된다.

한편 재생에너지 부문의 부패는 청정 에너지가 더 이상 깨끗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늦추게 된다. 또한 풍부한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보유했지만 사법·행정적 기반이 약한 경우에는 부패로 인한 '녹색 저주(green curse)'에 취약하게 된다. 즉,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과 공여국의 자금 등 공공 부문이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민간 부문의 부당한 이득 편취와 같은 형태로 왜곡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조직적인 범죄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부문의 부패는 종종 다국적 양상을 띤다. 특히 선진국의 투자자, 기업, 그리고 기업과 결탁한 정치인이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부패를 견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영국 수상은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이 우간다 정부에 태양광 장비를 공급하는 수백만 파운드짜리 계약에 서명하여 장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다른 예로는, 스페인의 최대 전기 유틸리티 기업이 수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허가를 대가로 칠레 정치인에게 3.5백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를 스페인 검찰이 조사한 바 있다.



출처: Petrofac 홈페이지

19 Kaunain Rahman, "Overview of anti-corruption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U4 Helpdesk Answer,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0).

한편 전 세계적으로 기존 화석에너지 기반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모호한 비즈니스 관행을 보이는 경우가 지적된다. 한 예로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향한 야심을 내보이고 있는 영국 에너지 서비스 공급업체 Petrofac Limited를 들 수 있는데, Petrofac Limited는 2019년에 글로벌 영업 부문장이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석유 계약을 유지, 연장하기 위해 뇌물을 이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그는 총 14건의 뇌물 제공혐의를 인정했는데, 이라크에 600만 달러를 뇌물로 공여하고 총 7억 3,000만 달러 이상을 수주했으며 사우디에서는 4,50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하고 총 35억 달러 이상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법정의 판결 직후 Petrofac의 주가는 29.3% 하락 마감했으며, 이후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은 Petrofac의 뇌물 공여 혐의 관련 대상과 기간을 9개국 15년으로 확대하여 수사하게 되었다.²⁰

[Case Study] – Schneider Electric (미국)²¹



2020년 12월, 미 법무부는 연방정부 건물에 태양광 패널, LED 조명, 단열재와 같은 다양한 에너지 절약용 신부품을 설치하기로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뒤 프로젝트 비용을 과잉 청구한 슈나이더 일렉트릭 빌딩 아메리카(Schneider Electric Building Americas Inc.)에

1,1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미 해군, 조달청, 농업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3건의 에너지 절감 성과 계약(ESPCs)에서 발생하는 설계 비용으로 약 170만 달러를 정부에 부정하게 청구한 사실을 시인했다. 해당 기업은 정부에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설계 비용을 여러 연방 프로젝트의 다양한 품목에 비용을 분산시키는 '묻기' 또는 '숨기기' 과정을 통해 각 기관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해당 행위와 관련해 비기소 계약을 체결하고 형사 물수로 약 17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에 동의했다.

20 초이스경제, “‘英 페트로팩 수주 뇌물 혐의, 국내 건설사에 호재될 듯’...홍국증권”, 2019.02.08,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55>; SFO, “Serious Fraud Office secures third set of Petrofac bribery convictions”, 2021.10.04, <https://www.sfo.gov.uk/2021/10/04/serious-fraud-office-secures-third-set-of-petrofac-bribery-convictions/>.

21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Government Contractor Admits Scheme to Inflate Costs on Federal Projects and Pays \$11 Million to Resolve Criminal and Civil Probes”, 2020.12.21, 2021.01.05에 업데이트, <https://www.sfo.gov.uk/2021/10/04/serious-fraud-office-secures-third-set-of-petrofac-bribery-convictions/>.

그린워싱(Greenwashing)과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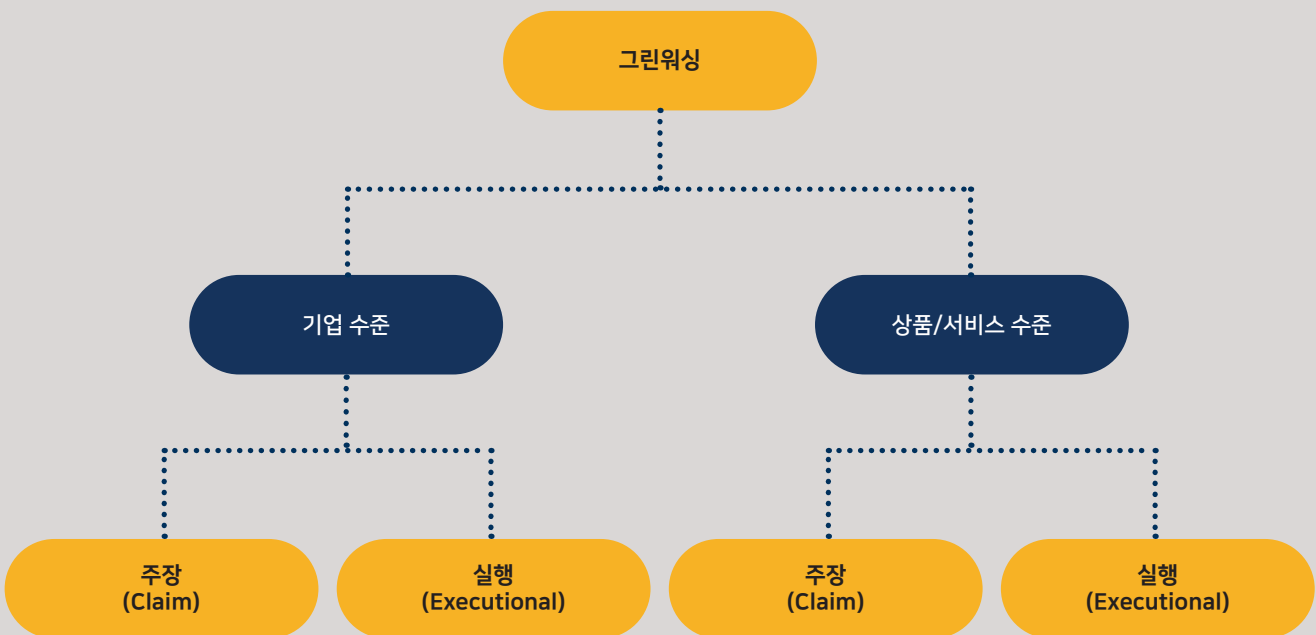
●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란?

뉴욕의 환경운동가 Jay Westerveld가 1986년 발표한 에세이에서 호텔 산업계가 고객들에게 '환경 보호' 활동인 "수건 다시 쓰기"에 동참해 줄 것으로 홍보함으로써 세탁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호텔 내부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 거의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며 Green과 White Washing을 합성하여 만들어 낸 용어²².

이후 그린워싱(Greenwash, 동사)은 "대중 또는 관계자들에게 개인, 회사, 상품이 환경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허위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으로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등재²³ 되며, 일반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 광고와 공시 등을 통해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는 기업 또는 기관의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꾸준히 사용되고 있음.

● 그린워싱(Green Washing)의 분류

2020년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그린워싱은 크게 기업 수준의 그린워싱과 상품, 서비스 수준의 그린워싱으로 분류될 수 있음. 각 수준의 그린워싱은 다시 친환경이라는 문자적으로 표현되는 "주장(Claim)"과 로고를 자연적 이미지로 사용하는 등의 이미지 워싱을 시도하는 등의 "실행(Executional)"적 워싱으로 분류될 수 있음²⁴.



출처: Netto S.(2020)

22 Jim Motavalli, "A History of Greenwashing: How Dirty Towels Impacted the Green Movement", 2011.02.11, <https://www.aol.com/2011/02/12/the-history-of-greenwashing-how-dirty-towels-impacted-the-green/>.

23 Oxford English Dictionary, "greenwash" (n.d.), <https://www.oed.com/view/Entry/251865#eid11644342>.

24 Sebastiao Vieira Netto et al., "Concepts and forms of greenwashing: a systematic review" Environmental sciences Europe, Volume 32, Issue 1 (2020):7-10.

캐나다 친환경 컨설팅 기업인 테라초이스(Terra Choice)가 2010년 발표한 "그린워싱의 7가지 죄악"이라는 보고서²⁵ 는 그린워싱을 분류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최근까지도 그린워싱 관련 연구에 인용되고 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감춰진 상충효과 (Hidden Trade-Off) :

일부의 친환경적인 특성만 강조함으로써 실제로 중요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감추는 행위

2. 증거 불충분 (Sin of No Proof) :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

3. 모호한 주장(Sin of Vagueness) :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예) "자연 원료(All Nature)"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지만, 사실 비소, 수은 등 중금속도 자연에서 발생하는 원료임.

4. 허위 인증의 추종(Sin of Worshipping False Labels) :

가짜 인증이나 라벨을 만들어 냄

5. 관련성 없는 주장(Sin of Irrelevance) :

대개 이러한 주장은 사실인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상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소비자의 관심을 의도적으로 다른 주제에 집중하게 하는 행위

예) '프레온 가스로 널리 알려져 있는 염화불화탄소(CFC)는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여겨져 이미 전 세계적으로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CFC-Free"라는 인증을 부착하는 상품을 판매하여 이미지 세탁을 시도하는 행위.

6. 누가 덜 나쁜가(Lesser of Two Evils) :

친환경과 거리가 먼 산업군 내에서 단순히 "그린" "친환경" 이라는 용어를 붙여 소비자에게 경쟁 제품 대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라고 유도하지만, 제품 자체의 유해성은 사라지지 않음.

예) 유기농 담배, 친환경 제초제, 친환경 살충제

7. 거짓 주장 (Fibbing) :

거짓 광고 또는 공시하는 행위

25 Terra Choice, The Seven Sins of Greenwashing Home and Family Edition (2010)
<http://faculty.wvu.edu/dunnc3/rprnts.TheSinsOfGreenwashing2010.pdf>.

● 에너지 산업의 환경 영향

에너지는 우리 사회 경제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3.2%²⁶가 에너지 생산 및 활용과 연관되어 발생하며, 특히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적절히 운영되지 않는 발전과 비효율적인 연료의 연소는 인간 활동에 기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가장 큰 배출원임²⁷. 이 외에도 수질오염, 열 공해, 폐기물 발생 등에도 기여함.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대기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향상됨에 따라 기후변화를 막고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더욱이 파리기후협약은 에너지 섹터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함.²⁸

● 에너지 산업의 그린워싱

에너지 산업은 서둘러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노력을 시도함. 또한 블랙락을 비롯한 세계적인 투자기관들은 석탄발전의 신규 투자 중단을 선언하고²⁹, 녹색 채권과 같은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투자 상품을 출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에는 그린워싱의 위험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음. 특히, 에너지 기업의 '친환경'에 대한 주장들은 결국 앞서 소개한 '그린워싱의 7가지 죄악' 중의 '누가 덜 나쁜가(Lesser of Two Evils)'의 싸움이 될 소지가 다분하며, 일부 기업들은 전체 사업 중 극히 일부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앞세워, 실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기반의 사업들을 숨기는 '감춰진 상충효과(Hidden Trade-Off)'를 노리고자 함. 또한 석유 생산 기업들이 노란색, 초록색 등의 재생에너지를 연상하게 하는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기업의 실체를 숨기고자 하는 '기업 차원의 시행적(Executional) 워싱'에 해당됨.

에너지의 직접적인 생산 및 사용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탈석탄 금융, 녹색 채권과 같은 친환경 사업 부분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그린워싱은 발생할 수 있음. 에너지 산업은 범위가 광범위하고, 전환에 드는 비용이 막대함에 따라 친환경 사업 전환에 많은 투자 유치를 필요로 함. 이를 위해 금융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녹색채권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이에 국내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은 작년 총 3조 4천억원 규모의 녹색 채권을 재생에너지 조달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위한 사업 비용으로 발행하였음. 하지만 상당 금액은 실제 온실가스 저감으로 이어지는 재생에너지 설비나 사업 투자가 아니라, 각 발전소에 할당된 재생에너지 의무 발전량을 채우기 위한 재생에너지 인증서(REC)구매에 사용되어 본래 녹색채권의 취지가 훼손되는 그린워싱이 발생함.³⁰

이와 같이 '녹색 사업'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녹색 금융이 편법으로 사용되는 그린워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친환경과 관련이 없는 사업들이 녹색 사업으로 둔갑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유럽은 진정한 친환경 사업을 분류 해 내기 위한 녹색 분류기준(Green Taxonomy)을 발표하고 2023년부터 모든 녹색 채권의 심사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임³¹[8]. 대한민국도 이에 맞춰 한국형 녹색 분류기준(K-Taxonomy)를 2021년 발표하고,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예정임³². 녹색 분류기준의 개발 및 도입 확대는 그린워싱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최근 문제된 천연가스(LNG)와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는 것과 같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6 Climate Watch, the World Resource Institute (2020), Our World in Data, "Emissions by sector".
<https://ourworldindata.org/emissions-by-sector> 에서 재인용.

27 IEA, Energy and Air pollution: World Energy Outlook Special Report (Paris: IEA, 2016).

28 위의 책.

29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SGS 리포트 11권 12호 (2022).

30 일요경제, "[2021 국감] 에너지공기업, 녹색채권 발행 그린워싱으로 악용", 2021.10.12,
<http://www.ilyoec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6338>.

31 European Commission, "EU Taxonomy: Commission presents 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 to accelerate decarbonisation", 2022.02.0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11.

32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2021).

제 3장. 에너지 산업의 부패 이슈 대응

1. 글로벌 정책 및 규제 동향
2. 주요국 에너지 산업 반부패 동향
3. 국내 에너지 산업 반부패 동향

1. 글로벌 정책 및 규제 동향

반부패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199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채택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OECD 뇌물방지협약, OECD Anti-Bribery Convention)”과 2003년 채택되어 2005년에 발효된 “유엔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Anti-Corruption, UNCAC)”은 반부패 관련 대표적 국제협약으로서 국제사회의 반부패 노력을 가속화하는 기점이 되었다.

OECD의 뇌물방지협약은 한국을 포함한 44여개국이 비준하였으며 (37개 OECD 회원국 및 7개 비회원국) 국내외 공무원 간의 뇌물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것을 규정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이다. 기존에는 뇌물 거래의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뇌물 제공 행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뇌물 수수자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으로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2021년 11월 OECD가 12년 만에 권고안을 업데이트 하면서 뇌물을 수수 또는 요구하는 자에 대한 규율이 추가되었다.

유엔반부패협약(UNCAC)은 가장 광범위한 부패방지협약으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UN 회원국이 비준하였다 (2021년 8월 기준 188개국). 각국 정부가 각종 부패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할 것과 특히 민간 부문의 부패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또한 투명성, 뇌물 금지를 강조하면서 공공역역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기업 차원의 주의의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반부패 규제 흐름에 발맞춰 2004년 “UNGC 10대원칙”에 반부패 원칙을 추가하며 반부패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명시하였다.

에너지에 관한 UN 고위급 회담 (United Nations High-Level Dialogue on Energy)



2021년 9월에 열린 United Nations High-Level Dialogue on Energy(HLDE)는 1981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유엔 신재생 에너지원 회의 이후 40년만에 열린 유엔총회 주관 글로벌 에너지 모임이다. HLDE의 주요 목표는 2030 지속가능 개발 아젠다의 에너지 관련 목표의 이행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솔루션 및 투자 및 다수 이해관계자들 간에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SDG 7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세계은행(World Bank) 및 에너지연구경영지원프로그램(Energy Sector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 ESMAP)의 주도로 에너지 워킹 그룹(Energy Working Group)이 운영되었다.

도출된 에너지 접근성에 대한 보고서(Theme Report on Energy Access)에는 2030년까지 전기 보급 및 깨끗한 요리 환경의 보편화를 위한 권고사항들을 포함하였으며 2025년까지의 중간 목표를 설정하였다. 포용적이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보고서 (Theme Report on Enabling SDGs through Inclusive, Just Energy Transitions)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정부의 거버넌스 및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강조되었다.

에너지 부문 내 부패 이슈는 부패에 취약한 산업 특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반부패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산업 내 부패 이슈에 대한 인식과 규제 또한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채굴산업 내 투명성 증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두드러지며, 산업 내 공시 흐름이 새로운 국제적 규범으로 부상하였다.³³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국제법보다는 자발적 이니셔티브 형태의 흐름으로 부상했으며 이는 기업 운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2003년부터 시행된 **채굴 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가 있다.

1) 채굴 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EITI는 석유, 가스 및 광물 산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증대를 위한 국제적 원칙 수립 및 이행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자발적 이니셔티브이다. EITI는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2002년 9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토니 블레어(Tony Blair) 영국 총리가 처음 언급하였고, 이후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가 주최한 회의에서 채굴 산업 이해관계자 간의 공동협력과 상호이해에 기반한 통일된 보고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합의가 도출되면서 도입되었다

³⁴

EITI는 12개 기본 원칙을 토대로 채굴 산업 공급망의 추출 단계에서부터 사회에서 사용되는 단계 전 과정에서 기업이 현지국 정부에 지불한 내역을 공개할 것을 각 국가에 요청한다. 즉,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납세, 계약, 생산 등과 관련된 정보와 채굴 산업 관련 수입 및 수익 내역을 공개하고 자원개발 기업들은 관련 지출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불투명한 자금의 흐름과 부패에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비록 자발적 캠페인의 형태이지만 참여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에너지 기업에 정보공시를 의무화할 책임이 있으며, 이 때 기업은 EITI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도 지출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발생한다. EITI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이행국, 자원개발 기업, 국제기구, 은행, 투자기관, 시민단체, 기부자 및 기타 EITI 후원자들이 조달하는 자금을 통해 운영된다.³⁵

EITI의 설립 배경이 된 Publish What You Pay (PWYP)

PWYP는 채굴산업의 투명성, 책임성 및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한 연합적 성격의 전세계적인 캠페인으로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2001-2002년 PWYP 회원들의 캠페인 결과로 EITI가 설립되었으며, Publish What You Pay는 EITI 이니셔티브가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데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PWYP는 채굴 기업 및 공급망 내 실 소유자, 계약, 지불 및 수익내역 공개를 목표로 하며 석유, 가스 및 광물산업 내 부패를 줄이고 발생한 수익이 사회에 환원되도록 촉구한다. 현재 1,000개가 넘는 조직 및 51개의 국가가 참여 중이며,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 및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참여를 함께 독려하고 있다.

(출처: Publish What You Pay, 2019; PWYP 홈페이지)

33 Oxfam, Contract Disclosure Survey 2018: A review of the contract disclosure policies of 40 oil, gas and mining companies (2018).

34 최철, "미국 Dodd-Frank 법과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가 해외 자원개발 산업에 갖는 함의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39권 2호 (2015): 1-17.

35 Päivi Lujala, "An analysis of the Extractive Industry Transparency Initiative implementation process", World Development 107(2018): 358-381.

[EITI의 구조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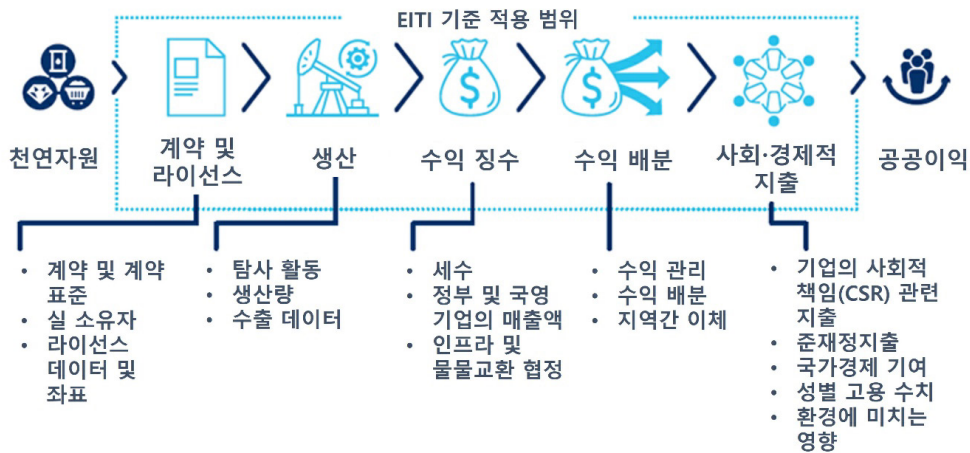
EITI는 선언적 규칙(Rules)으로 시작하여 2013년 구체적인 규범 및 절차를 포함하는 기준(Standard)으로 발전하였다.

EITI 기준은 총 두 차례의 주요 개정을 거쳤다. 2016년 개정을 통해 실 소유자 정보 공개 요건이 추가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2019년 개정을 통해 계약, 젠더, 환경 및 상품 거래에 대한 정보공개 요건 또한 포함되었다.

EITI 이행국은 후보국(Candidate Country)과 준수국(Compliance Country)로 분류되며 가입-준수-인증의 절차를 거친다. 각 국가는 후보국 가입 후 후보국으로 승인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첫 EITI보고서를 발간해야 하며 2년 반 이내에 인증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인증 절차를 통과하면 후보국에서 준수국으로 승격된다.

EITI 체제는 일방적인 평가 또는 규제 체제가 아니며 정부, 기업, 기관투자자, 시민사회, 파트너 기관 등으로 구성된 다수 이해관계자그룹(Multi-Stakeholder Group, MSG)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통해 성립된다. EITI 이행국들이 준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 과정은 EITI 국제사무국이 지정하는 외부 기관인 인증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진행하지만 다수이해관계그룹은 인증과정 가운데 활발한 의견 제시 및 시행 제안 등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 결과는 아웃리치 및 후보 위원회에 전달되며, 이사회 산하 인증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검토해 준수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³⁶

<EITI를 통해 공개되는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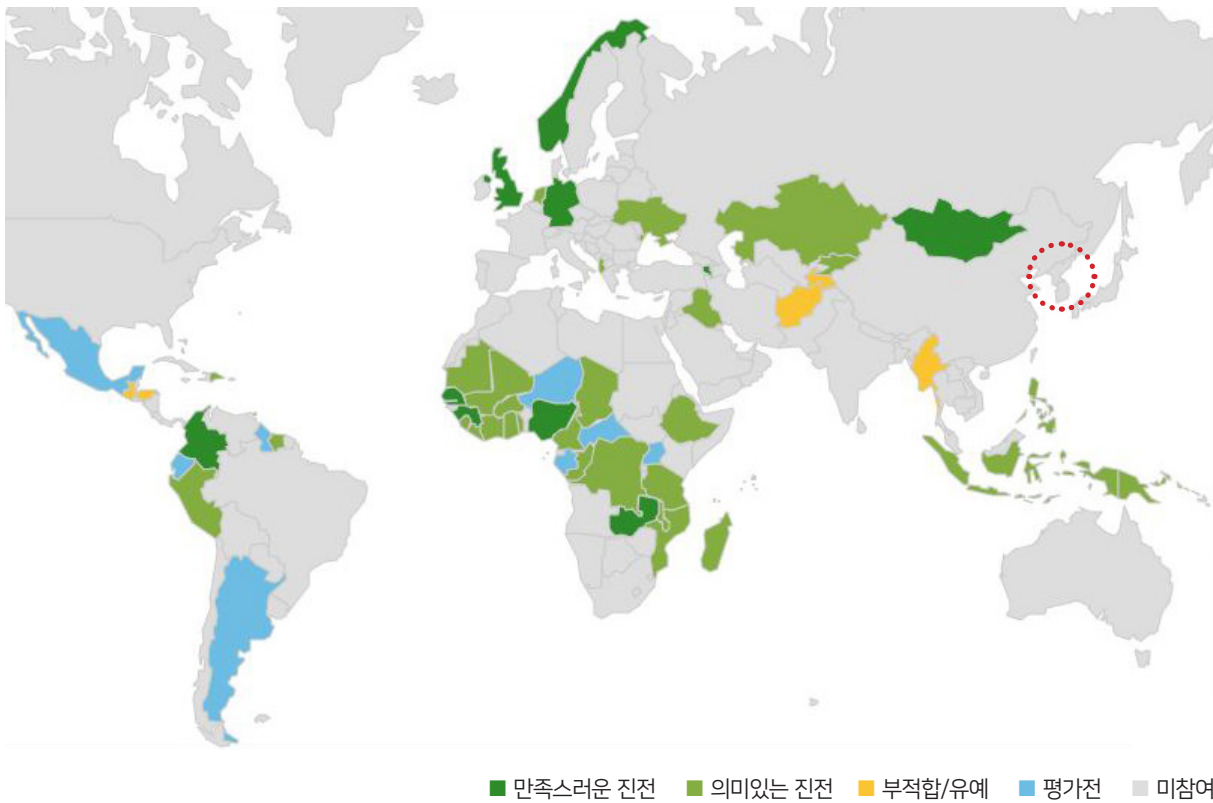
출처: EITI (2020)/ UNGC 한국협회 번역

36 최철, "미국 Dodd-Frank 법과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가 해외 자원개발 산업에 갖는 함의에 관한 소고" (2015).

[EITI 참여 국가 및 지지 단체]

2022년 현재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56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행 수준에 따라 만족스러운 진전, 의미있는 진전, 부적합 또는 유예, 평가 전의 4단계로 구분된다. 한국은 현재 EITI 미가입국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EITI 이행국에서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현지에서 따르는 보고의무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단계	참여 국가
만족스러운 진전(11)	아르메니아, 콜롬비아, 몽골,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필리핀, 독일, 세네갈,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영국, 잠비아
의미있는 진전(31)	알바니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차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에티오피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네덜란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콩고공화국, 가나, 기니, 인도네시아, 이라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리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세이셸, 시에라리온, 수리남, 탄자니아,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부적합/유예(6)	과테말라, 온두라스, 아프가니스탄(유예-정치적 불안정), 미얀마(유예-정치적 불안정), 타지키스탄(미제출), 상투메프린시페(미제출)
평가 전(8)	아르헨티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콰도르, 멕시코, 니제르, 가봉, 가이아나, 우간다



출처: EITI (n.d.) "Countries"

EITI는 국가 단위의 참여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으로부터의 지지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89개의 기업 및 단체가 EITI를 지지하고 있다. 채굴 부문의 투명성 증진을 지지하는 기업,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은 EITI에 재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지지를 표현하고, EITI 이사회에서 의석을 가질 수 있다. 현재 EITI를 지지하는 국내 기업/기관은 없으나, 산업 내 리더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국제적 평판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동기에 의하여 개별 기업이 EITI 지지 회사(supporting companies)로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³⁷

구분	기관
기업(64개)	Chevron, Royal Dutch Shell, BHP 등
시민사회(8개)	옥스팜(Oxfam),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Publish What You Pay(PWYP) 등
재단(2개)	BHP 재단, Lundin 재단
지지 국가(15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미국, 영국, 스위스, 스웨덴, 독일,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출처: EITI (n.d.) "Supporters"

[EITI의 참여혜택³⁸]

- 정부: 투명성 확보를 통해 기후 투자 현황을 개선하고, 라이선스, 데이터 보관, 세금 징수, 법률 및 재정구조에 대한 도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석유, 채광, 가스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기업 및 투자자: 불투명한 거버넌스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불안정성은 투자 위협 요소이다. 정부의 재정 투명성을 통해 투자 및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시민사회: 정부의 재정 상황을 공개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을 향상한다.

[EITI의 참여자격 유지 조건³⁹]

- 보고서: 매년 EITI 보고서(전 회계연도 분기의 자료 포함)를 제출한다.
- 연회비:
 - 참여 기업(석유 및 가스 기업)은 시가 총액에 따라 20,000 달러, 40,000 달러, 60,000 달러를 납부한다.(단, 광산 기업은 최소 15,000 달러를 납부한다).
 - 참여 국가는 일정 수준의 분담금을 납부한다 (2017년 이후 참여 국가는 국제 EITI 본부에 10,000 달러의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EITI의 역할]

EITI는 채굴 산업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주류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개혁의 선순환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EITI는 에너지 산업 내 채굴 산업의 국제적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EITI에 참여하는 것이 채굴 산업 관련 부패 감소 및 정부의 책임성 증대,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뢰 형성 및 투자환경 개선 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⁴⁰. 비록 역지력은 없지만 국제적 연성규범체계의 역할을 담당하며 채굴 산업 지출내역공시 흐름을 주도해왔고 세계은행(World Bank)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다자기구 또는 각국 정부에서 공인된 국제 기준으로 명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재생에너지산업에서도 재생에너지 투명성 이니셔티브("Renewable Energy Transparency Initiative") 또는 재생에너지 부패 이니셔티브 ("Renewable Energy Corruption Initiative") 등 EITI의 성공사례와 유사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설립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⁴¹.

37 최철, "미국 Dodd-Frank 법과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가 해외 자원개발 산업에 갖는 함의에 관한 소고" (2015).

38 UNGC 한국협회, 산업별 이행가이드: 기회와 우수사례 (2019).

39 위의 책.

40 Benjamin Sovacool, "Is sunshine the best disinfectant? Evaluating the global effectiveness of the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 The Extractive Industries and Society Volume 7 Issue 4 (2020): 1451-1471.

41 Sovacool, "Clean, low-carbon but corrupt?" (2021).

[EITI의 한계점]

EITI는 자발적 이니셔티브이기에 불응 또는 탈퇴 시 제재 방법이 없고, 기업이 재량적으로 지출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지출 내역 공시는 제외된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⁴². EITI 가입 후 EITI 기준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까지 평균 5.7년이 걸리며, 각 국가마다 이행 속도는 매우 상이하다⁴³. 게다가 러시아, 중국처럼 자원이 많고 이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큰 국가들 중 일부는 EITI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가 EITI의 국제적 중요성을 인식하며 2013년 후보국 지위를 신청하여 2014년 후보국 지위를 승인 받았으나 트럼프 정권 시절 EITI를 탈퇴하였다. 참여 국가의 수가 제한적일수록 부패에 가담할 리스크가 높은 기업을 제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공시의무가 없는 나라에서의 에너지 기업과의 비대칭적인 정보공개로 발생하는 문제 또한 야기된다. 이는 결국 국제적 기준에 따라 채굴산업에 가담하는 모든 자원개발기업들이 동등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EITI 체제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2) 계약 공개 및 투명성 강화 흐름

한편 주요 국제금융기관들의 주도로 에너지 산업 내 계약 공개(contract disclosure)의 흐름이 새로운 글로벌 규범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펀딩을 받는 석유, 가스 및 광물 프로젝트는 관련 계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계약정보 공개의 목적으로는 산업 내 투명성 증대, 정부간 또는 정부 및 기업간의 정보·권력의 비대칭성 해소, 잠재적 유익과 리스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기대 현실화 및 지역 공동체와 신뢰구축 등이 제시되고 있다.

-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2010 Principles for Responsible Contracts 에는 국가와 기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제공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계약공개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 국제통화기금(IMF)은 2007년 자원 수익 투명성 가이드 (2007 Guide on Resource Revenue Transparency) 및 2016년 draft Natural Resource Fiscal Transparency Code를 통해 정부의 석유, 가스 및 광물 산업 관련 계약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World Bank Group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는 2014년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의 석유, 가스 및 광물 산업의 계약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RBD)는 2013년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탄화수소 프로젝트의 계약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공개 흐름은 국제석유산업환경보전협회(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IPIECA) 및 국제광업연맹(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and Minerals, ICMM) 등 주요 에너지 관련 산업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계약 정보의 공개 외에도 최근 10년간 에너지 부문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대를 위한 연대적 노력이 정부·민간·시민사회에서 다각도에서 이루어져왔다. 공개된 정보의 일관성 결여 및 강제력 부족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시 및 투명성 강화는 점점 다음과 같이 국제적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42 Sidney Gray et al., "Extractive Industries Reporting: A Review of Accounting Challenges and the Research Literature", Abacus (Sydney) Volume 55 Issue 1 (2019): 42-91; Constantino Grasso, "The troubled path towards greater transparency as a means to foster good corporate governance and fight against corruption in the energy sector" in Stephane Goutte and Duc Khuong Ngyugen (eds.) Handbook of Energy Finance Theories: Practices and Simulations (World Scientific, 2020).

43 Lujala, "An analysis of the Extractive Industry Transparency Initiative implementation process" (2018).

● 천연자원 거버넌스연구소 (Natur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은 석유, 가스 및 광물 산업의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싱크탱크로 2010년 천연자원 헌장(Natural Governance Charter)에 계약 공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2014년 개정을 통해 각 정부가 계약 정보를 포함하여 할당 절차, 라이선스의 실제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합의된 프로그램 및 라이선스와 관련된 재무적 약속을 공개할 것을 명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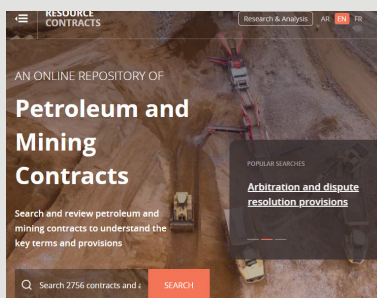
● 열린계약파트너십(Open Contracting Partnership, OCP):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비영리기구이다. 정부 지출의 1/3이 기업과의 계약에 쓰이는 것으로 추산하며, 특히, 정유, 가스 및 광물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81개국의 35억명의 사람들의 웰빙에 영향을 준다고 파악한다. 열린계약파트너십(OCP)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석유 및 광물 관련 계약 보고인 ResourceContracts.org를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천연자원 거버넌스 연구소(NRGI)와 함께 2018년에 공동으로 낸 보고서에서 채굴산업 내 계약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 증대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16가지 관행을 제시한 바 있다.⁴⁴ 열린계약파트너십(OCP)은 EITI, Publish What You Pay (PWYP)에 파트너기관으로 참여하며 투명한 지출내역공개를 함께 옹호하고 있다.⁴⁵

● Open Solar Contract: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와 테라와트 이니셔티브(Terrawatt Initiative, TWI)가 공동으로 시작한 이니셔티브로, 파리기후협약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하여 태양광 에너지 발전 확대를 지지하는 한편 빠르고 보편적인 계약 정보의 제공을 통해 프로젝트 개발 및 재무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B Team Responsible Tax Principles은 다국적 기업들이 2018년에 자발적으로 수립한 원칙으로, 특정 상황에서의 계약정보 공개를 옹호하고 있다. 이 원칙들을 창립한 기업 중 네 기업은 BHP Billiton, A.P. Moller-Maersk, Repsol, Royal Dutch Shell 등 주요 채굴기업이며, 계약공개에 대한 기업 정책이 점진적으로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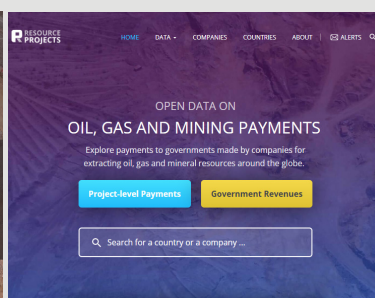
출처: Oxfam, 2018; Open Contract Partnership, n.d.; Open Solar Contract, 2022/ UNGC 한국협회 재구성

계약 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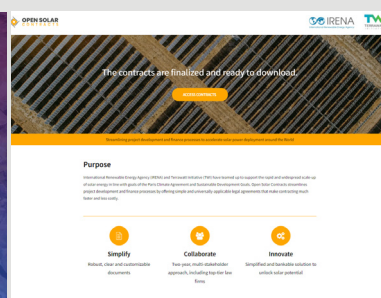
resourcecontracts.org:

석유 및 광물 관련
계약 정보



resourceprojects.org:

석유, 가스 및 광물 관련
지불내역 정보



opensolarcontracts.org/:

태양광 프로젝트
계약 정보

44 NRGI and Open Contract Partnership, Open Contracting for Oil, Gas and Mineral Rights: Shining a Light on Good Practice (2018).

45 Open Contract Partnership, "Delving into the world of oil, mining and gas contracts with open contracting" (n.d.), <https://www.open-contracting.org/what-is-open-contracting/extractives/>.

기후 변화를 해결하려면 부패에 맞서라

- 짐 앤더슨(Jim Anderson) / 세계은행 수석 거버넌스 전문가

개발 우선순위들을 뉴스 헤드라인과 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하는 관계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목표들은 종종 시너지를 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인 기후변화 이슈 이외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기후변화 의제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 부패와의 싸움이 좋은 예이다. 언론은 부패의 비용을 가격으로 환산하기를 좋아하지만, 실제로 부패의 피해는 잘못된 혹은 나쁜 투자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금액에는 해수면 상승이나 사막화 등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지출액이 포함되기도 한다. 부패의 진정한 비용은 기후변화로 인해 찾아지는 자연재해에 대한 부적절하고 느린 대응이다. 이는 기후위기와 같은 긴급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여력의 부족과 같은 형태로 발생한다.

기후변화 대처에 중요한 일부 부문이 부패 취약성으로 악명 높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비용과 지대의 규모가 큰 채굴산업은 오랫동안 환경 및 반부패 운동가들의 관심사였다. 경제적 지대, 외진 위치, 그리고 실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의사 결정자들 간의 힘의 불균형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약탈형 지도자 및 채굴업체들에 의해 경제적 지대가 빼돌려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패로 인해 규제와 이의 제기는 무시되고 이는 환경 훼손과 자원 남용으로 이어진다. 처음으로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국가정보판단보고서(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에 의하면 수익을 얻기 위해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고착된 정치적 이익, 고질적인 부패 및 법적·경제적 제도부족으로 수출 수익의 원천을 다양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후변화 대처에 핵심적인 일부 산업이

부패 리스크로 악명 높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완화 전략들도 부패로 인해 약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한 임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벌목권, 집행기구, 세관, 해외 시장을 둘러싼 부패의 덩불을 헤치고 나아가야 하며, 이는 수입의 손실과 남용으로 이어진다.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장래성이 있으려면 부패로 인한 보조금 부당 사용, 비용 인플레이션 및 효율성 악화 등을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부패는 의미 있는 공동 노력을 크게 방해한다. 정치와 경제가 긴밀히 유착된 곳에서는 규제와 세제의 변화 등 기타 기후변화 대응책에 반대하는 여러 이해관계들이 합법과 불법 사이의 애매한 경계에서 이익을 본다.



부패를 잘 통제하는 나라에서도 기후관련 정책에 반하는 노력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종종 성공적이다. 하물며 부패가 잘 통제되지 않는 곳에서 그러한 영향력의 효과는 즉각적이다. 불공정한 로비활동, 정경유착, 이해충돌 등은 탄소세 시행에 걸림돌이 된다. 게다가 탄소 기반 대규모 에너지 기업들이 국가에 가하는 압력은 기후 친화적인 에너지원의 개발 자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기후와 부패 사례 도감(Climates and Corruption Case Atlas)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것들은 단지 진행 상황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 사례들이 아니다.

모든 종류의 부패 및 국가 포획을 다루는 것이 유익할 수 있지만, 이미 반부패 의제로 떠오른 몇몇 문제들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실 소유자와 관련된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실제 자산이나 사업활동 없이 명의만 있는 회사의 남용을 막으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은 기후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기후변화 프로젝트의 기획과 관련한 부패에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이 기후변화를 야기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야기하는 중입니다.
그중 규칙을 어기는 부패행위는
문제를 악화시키고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부패한 관행을 바꾸고, 부패에 주의를 기울이고, 부패와 국가 포획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게 된다.

출처: Anderson (2021).

2. 주요국 에너지 산업 반부패 동향

국제사회의 노력에는 반부패 및 투명성 관련 법을 강화하는 각국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을 부패와 관련된 최초의 국제법으로 제정해 기업이 국제상거래 과정에서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및 회계 부정 등의 부패행위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이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Scandal)으로 에너지산업 내 대규모 부패가 드러나면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⁴⁶ 이는 미국을 선두로 세계 무역질서를 크게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협력기구,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와 국제투명성기구 등의 NGO의 지지에 힘입어 반부패 관련 규제 및 법 제정의 국제적 흐름으로 이어졌다.⁴⁷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1998년 해외공무원부패법(Corruption of Foreign Public Officials Act), 영국의 2010년 뇌물법(Bribery Act), 브라질의 2013년 반부패법(Anti-Corruption Act) 및 프랑스의 2016년 사팽2법(Sapin II Law) 등이 제정된 바 있다. 특히 프랑스의 사팽2법(Sapin II Law) 또한 미국의 사례와 같이 에너지 기업들의 중대한 부패로 인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⁴⁸

한편, 에너지 산업 내 부패적결 및 투명성 증대를 위한 여러 자발적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보완하기 위해 몇몇 국가들이 EITI 기준에 상응하는 채굴 산업 관련 국내 법안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제3국의 입법을 통해 EITI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지출하는 내역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연성규범인 EITI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⁴⁹



출처: Gazprom 홈페이지

46 Grasso, "The troubled path towards greater transparency" (2020).

47 Constantino Grasso, "The Dark Side of Power: Corruption and Bribery within the Energy Sector" in Rafael Leal-Arcas and Jan Wouters (eds.), Research Handbook on EU Energy Law and Policy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48 UNGC 한국협회, Fair Player Club Compliance Package 유럽편 (2017).

49 최철, "미국 Dodd-Frank 법과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 (2015).

[Case Study] 프랑스 사법2법 도입의 계기가 된 에너지 반부패

2000년 9월 OECD 뇌물방지협약(OECD Anti-corruption Convention) 가입 이후 프랑스는 외국공무원의 해외 부패 행위에 대한 약한 처벌로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알스톰, 테크닙, 토탈을 포함한 여러 프랑스 기업이 부패 혐의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고액 벌금 순위 TOP 10에 드는 등 막대한 기업 손실과 과징금으로 프랑스 내에서 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사법2법의 도입 배경이 되었다.

[알스톰 (Alstom)]



프랑스 에너지 및 운송기업 알스톰은 한 해외 뇌물수수 사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대만, 바하마 등 다양한 국가의 정부관리에게 미화 7,50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알스톰과 자회사는 국유 기업의 전력, 그리드 및 운송 프로젝트 계약을 수주하는 조건으로 정부관리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알스톰은 이로 인해 40억 달러 상당의 전력 프로젝트를 확보하였고 3억 달러의 이윤을 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알스톰은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정부 관리에게 뇌물을 전달했다. 알스톰은 2014년 미 법무부에 미화 7억 7,2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토탈 (Total)]



2016년 12월, 프랑스 최대의 에너지그룹 토탈은 유엔의 대(對) 이라크 석유-식량 프로그램(UN oil-for-food program)과 관련한 뇌물 제공 등의 혐의에 대해 75만 유로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유엔의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1990년 쿠웨이트 침공 이후 유엔의 경제제재를 받던 이라크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물자 구입을 위한 석유 수출을 허용한 조치로, 토탈은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이라크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본 사건은 2013년 프랑스 법원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해외 법정에서 외국 공무원의 뇌물죄에 대해 기업에 유죄를 선고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테크닙 (Technip)]



2000년도 초 미국 정부는 미국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체인 KBR(Kellogg Brown&Root) 자회사의 FCPA 위반 혐의를 조사하던 중 해당 기업이 나이지리아 LNG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나이지리아 공무원들에게 1억 8,000만 달러의 뇌물을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2009년 KBR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해 1억 7,700만 달러 상당의 사업 이익을 몰수당했다. 이로 인해 2010년 KBR의 나이지리아 사업 파트너였던 프랑스 엔지니어링 회사 테크닙은 미국 증권시장의 상장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FCPA 위반으로 9,8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출처: UNGC 한국협회 (2017b)

2011년 프랑스 도빌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8개국 정상은 정유, 가스 및 광물 기업들이 국가에게 지출하는 내역을 공개할 것을 격려하거나 의무화하는 자발적인 기준 또는 관련 규제와 법안을 제정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EU는 EITI를 장려하고 공통된 국제 보고 기준을 확립하여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증대하는 활동을 지지할 것을 선언하였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원하는 EITI의 완전한 구현을 포함하여 다른 영역의 투명성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 특히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채굴 기업이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거나 지원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또한 수익 투명성을 높이고 투명성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거나 석유, 가스 및 광업 회사가 정부에 지불한 금액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권장하는 자발적 표준을 촉진하기 위한 보완적인 노력을 환영합니다.”

- Deauville G8 선언

이러한 G8 정상의 선언을 발판 삼아 최근 10여년간 채굴 산업 내 반부패 규제 및 국내법 제정에 대한 국제적 흐름이 더욱 두드러졌다. 국내법의 경우 보고된 지출 내역을 토대로 각 국가가 정보를 공시하는 EITI와는 달리 자원 채굴자인 각 기업이 지출내역공시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는 부패에 취약한 에너지산업 내 채굴 산업에 특화된 공시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채굴 기업 입장에서는 국제기구 등의 주도 하에 보편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 가능한 통합된 기준을 선호하나,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해 각국의 보고 기준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이 확산되고 있다⁵⁰.

<에너지 산업 반부패법 동향>

<p>20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8 Evian 정상회담 EITI가 공식 출범(2003년)한 이후 G8은 채굴산업 내 투명성 증대를 위해 EITI를 공식적으로 지지 	<p>20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8 Deauville 정상회담 EITI를 보완하기 위해 각국의 투명성 관련 법 제정 및 EITI에 상응하는 채굴산업 대상 자발적인 공시제도를 도입을 장려 	
<p>20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Reports on Payments to Government Regulations 	<p>2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Accounting Directive/ Transparency Directive · 노르웨이 Report on Payments to Governments 	<p>2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Dodd-Frank Act Section 1504
<p>20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Extractive Sector Transparency Measures Act (ESTMA) 	<p>20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Extractive Sector Transparency Law 	

출처: EITI 홈페이지 및 NRGi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UNGC 한국협회 리서치 및 재구성

그러나 이러한 지출내역공시 흐름은 공시를 금지한 나라들에서도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출내역 공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만일 예외 상황을 둘 경우 일부 국가는 지출내역공시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많은 국가들이 투명성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동인을 약화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든다. 반면 지출내역 공시의 보편적 의무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출금 공개를 금지하는 해당국 법제와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히 공시의무가 있는 기업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되어 결국 공시의무사항이 없는 경쟁사들에 뒤쳐져 글로벌 자원개발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도드 프랭크법(Dodd-Frank Act) 제 1504조의 경우 채굴산업 지출내역공시 의무화 법안으로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된 만큼, 이러한 참여할 갈등의 본원지가 되었다. 한편 해당 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EU에서는 회계 지침(Accounting Directive, Directive 2013/34/EU) 및 투명성 지침(Transparency Directive, Directive 2013/50/EU)이 도입되었다.

50 European Union, Review of country-by-country reporting requirements for extractive and logging industries: Final report (2018).

1) 미국 도드 프랭크법 (Dodd-Frank Act) 제1504조(Section 1504)



- **도입 연도:** 2012년 (법 제정: 2010년)
- **도입 배경:** 미국 정부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제정 이후 채굴산업에서의 투명성 제고 및 반부패 운동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해외부패방지법(FCPA)가 에너지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이긴 하나 기업이 해외 정부에 지출 관련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은 없었다. 이러한 공백은 전세계적 금융기업들의 부패를 드러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더욱 두드러졌고, 이는 미국 금융시스템의 투명성 및 책임성 증진을 통해 금융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줄여서 Dodd-Frank Act)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다 (Grasso, 2020). 특히 2012년에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법이 개정되며 에너지 채굴 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버넌스가 약한 나라들의 공공부패 내 부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1504조가 도입되었다.
- **주요 내용:**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되어 연례 보고 의무가 있는 석유, 가스 및 광업 등 채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미국 연방정부 및 해외 정부에 지출 내역을 프로젝트 단위로 공시해야 한다. 지출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최대 270일 이내에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각 기업은 해외 정부에 지출한 내역을 연례 보고서의 형태로 공시할 의무가 부과된다. 공시를 금지한 나라들에서도 이 법률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동향:** 미국은 EITI가입 이전부터 이러한 입법적 노력을 통해 채굴 산업 투명성 증대에 힘써왔다. 도드 프랭크법의 제1504조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주요 자원개발기업의 지출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기 때문에 EITI 체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게도 간접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하는 압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EITI체제의 강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조항은 관련 공시를 금지하는 나라들에서도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에너지 기업들의 반대 소송과 우려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수차례 이행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못했다. 2016년에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2018년 시행, 2019년 첫 공시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 및 법원의 반대로 2017년에 무효화되었다. 2020년 12월 16일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었으나⁵¹ 이 법률은 국제적 기준인 EIT기준에 비해 규제 수준이 약해 본래 제1504조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법안이 호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하원의 반대로 2016년에 폐지되었다.

[Case Study] 국내 기업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사례⁵²

2007년 미국의 석유 시추선사인 '프라이드'(현재 벨라리스) 자회사가 발주한 드릴십 수주 과정 참여한 A기업의 미국 내 직원들이 시추선 인도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개인과 뇌물 공여를 공모했다. 해당 시추선은 브라질 석유 공기업 페트로브라스가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드릴십 건조계약 중개인이 A기업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브라질 공무원에게 수백만 달러의 뇌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미 법무부는 A기업의 성실한 조사 협조와 부패방지 정책·준법 프로그램 운영 등의 노력을 참작하여 2019년 11월 벌금 7500만 달러(약 900억 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합의를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준법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실시 성과를 보고하도록 명령했으며, 3년 유예기간 내 합의가 준수되면 해당 사건은 기소 없이 종결된다. 한편 브라질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는 장비 및 건설 관련 계약 수주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미국 법무부 및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해 8억 5,300만 달러(약 9,5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하였다.

51 1) 프로젝트 단위가 아닌 국가 단위로 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함 2) 해외 정부가 지출 내역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 기업은 공시의무로부터 면제받음 3) 보고 의무 최소 금액을 10만달러에서 15만달러로 상향 조정함.

52 국민권익위원회, 윤리준법경영 브리프스 2021년 8월호; Reuters, "Samsung Heavy Industries to pay \$75 million to resolve foreign bribery case: U.S.", 2019.11.23.

2) 유럽 연합(EU)의 회계지침(Accounting Directive)/투명성 지침(Transparency Directive)



- **도입 연도:** 2013년
- **도입 배경:** 2008년 금융위기가 미친 막대한 국제적 파급력으로 인해 유럽 연합(EU) 또한 시장 규제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이 생겼다. 특히 미국의 도드 프랭크법(Dodd-Frank Act)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이에 상응하는 EU 법안을 제정할 것을 유럽 의회가 유럽 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천연 자원의 사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각국의 EITI 채택을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회계 지침(Accounting Directive, Directive 2013/34/EU) 및 투명성 지침(Transparency Directive, Directive 2013/50/EU)이 도입되었다.
- **주요 내용:** 두 지침 모두 채굴 기업들이 해외 정부에 지출하는 내역을 공개할 것을 의무화한다. 회계 지침의 경우 유럽연합(EU) 또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의 법이 적용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단위의 연간 지출내역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10장 41, 42조). 투명성 지침은 기업이 유럽연합(EU) 또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EU가 규제하는 시장에 상장되었을 경우 지출내역공시의무를 적용한다 (제 6조). 이는 회계 지침 도입 후 기업간 형평성을 위해 추가된 내용으로 2016년 1월 이행이 시작되어 2017년부터 공시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도드 프랭크법 제1504조와 매우 유사한 법안이나 EU의 지침의 경우 정유, 가스 및 광물 산업뿐만 아니라 벌목 산업에도 적용되며 채굴 산업 내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미국과는 달리 대기기업의 경우 비상장사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EU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되어 구속력이 발생하며, 이행의 형태와 방법에 있어서는 각국의 재량에 맡긴다. 벌목 산업을 미포함하는 것을 제외하고 캐나다의 Extractive Sector Transparency Measures Act은 EU 지침과 완전히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법안이다⁵³.
- **동향:** 2014년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두 가지 지침을 국내법으로 법제화하였다. 이는 EU회원국이 아닌 유럽 국가들에도 영향을 주어 노르웨이 (2013), 스위스(2020) 또한 비슷한 법안을 도입하였다. 유럽 연합 공시 프레임워크의 실효성에 대한 EU의 2018년 보고서에 의하면 EU의 보고 방식이 EITI보다 신뢰도 및 실효성이 더욱 뛰어나며 전반적으로 채굴 산업에서 투명성을 증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제3국이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한다거나 유럽연합(EU)의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도 찾아볼 수 없었다. EU의 두 지침으로 인해 EITI에 새로 가입하는 사례는 없었으나 EU의 프로젝트 별 보고 방식(project-by-project reporting)을 EITI가 채택하는 등 잠재적 시너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⁵⁴.

[Case Study] Kosmos Energy (미국)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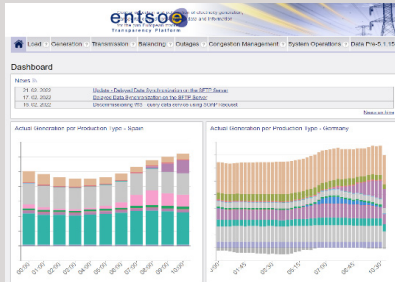
코스모스 에너지는 대서양에 중점을 둔 심해 석유/가스 탐사 및 생산 회사로, 뉴욕 및 런던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코스모스는 미국과 영국에서 공공 정책 대화에 참여하고 국제 행사에서 투명성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 향상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코스모스는 EU 회계 지침(European Union Accounting Directive)에 따라 프로젝트 수준에서 정부에 대한 지불금 공개를 이행함과 동시에, 도드 프랭크법 1504조에 따라 미국 및 외국 정부에 지불한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한편 2017년 코스모스는 석유, 가스 및 광업 부문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영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는 서한을 영국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 전략부(UK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에 제출하였다.

53 European Union, Review of country-by-country reporting requirements for extractive and logging industries: Final report (2018).

54 위의 책.

55 EITI, "Kosmos Energy," (n.d.) <https://eiti.org/supporter/kosmos-energy>

EU 재생에너지 투명성 플랫폼, 'ENTSO-E Transparency Platform'



유럽연합은 2009년부터 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제 24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투명성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 간의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각 국가의 재생에너지 액션플랜, 전망,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에너지 공급 평가 자료 등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문서들을 공개하는 플랫폼이다.

출처: EC, 2020, Rahman, 2020에서 재인용

이외에도 각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계약 공개 규범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까지 40개가 넘는 국가들이 채굴산업 관련 계약 및 라이선스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⁵⁶, 27개 국가가 국내법을 통해 채굴 산업 관련 계약을 일부 또는 전부 공개할 것을 허용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 (OCP, 2022).

3) 중국: 형법 및 경쟁법



- **중국의 반부패 활동:** 아시아의 부패 리스크 평가는 서구권에 비해 제한적이고 어려우며, 채굴산업 지불내역 공개를 지지 및 의무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참여하는 국가도 적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측정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중국은 180개 국가 중 66위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높은 부정부패율을 줄이기 위해 중국 정부는 국내외 부패 관리 및 경제사범 검거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반부패 운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2014년 중국 최초로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2013년 반부패보고서를 공포하고 2015년 11월 형법 9차 개정 및 2018년 경쟁법을 개정해 벌금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진핑 주석의 부패 척결 슬로건 하에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에서도 엄격한 부패 및 뇌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 **법률 체계:** 중국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급행료, 돈세탁, 적극적 뇌물과 소극적 뇌물, 선물 등 여러가지 부패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포괄적인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다. 중국의 부패 방지 관련 주요 법률로 중국 형법과 중국인민공화국 반부정부당경쟁법("중국경쟁법")이 있다.

- 중국 형법(1980년 제정/2015년 9차 개정): 뇌물의 수수 및 공여를 중대범죄로 처벌하며 "국가공무원" 또는 "단체"(국가 기관, 국가 소유 기업, 회사, 기관, 인민조직 등 포함)에 적용되는 "공적 뇌물"과 "비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 또는 "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게 적용되는 "상업뇌물"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형법은 중국 국민 또는 외국인을 막론하고 중국 영토 내 발생한 범죄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 중국 경쟁법(1993년 제정/2018년 개정):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보호하고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어 "상업 뇌물"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8년부터 경쟁법의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 상업 뇌물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업 책임 명확화, 행정처벌 수위의 증가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감찰위원회를 설립해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의 부패 행위 감시를 강화하였다.

56 각 국가의 계약 공개 관행 및 정책은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FXEeD43jw6VYHV8yS-8KJ5-rR5l0XtKxVQZBWzr-ohY/edit#gid=0> 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tur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 "Contract Disclosure Practice and Policy", 2021).



출처: Sinopec 홈페이지

- **에너지 산업:** 중국의 천연자원산업은 투명성이 낮아 부패 위험이 높으며 특히 광산 분야가 사기, 뇌물 및 리베이트에 취약하다. 채굴산업은 감독과 투명성이 부족한데 낮은 퀄리티의 정부 보고서, 계약 조건, 수익, 자원 보조금의 투명성 결여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최근 중국정부는 제도와 시스템정비를 통해 법치주의 및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반부패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 속에 국유기업의 경영 비효율 및 부패 문제 개혁을 위한 혼합소유제를 도입하고 중국 최대 국영석유기업인 시노펙(Sinopec) 및 CNPC(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에 먼저 적용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2018년 첫날 뇌물 단속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중국석유천연가스유한공사 등에 선제적으로 이행 방안을 구축하기도 하였다⁵⁷.
- **동향:** 중국은 시진핑 집권 후 정부 주도로 에너지 산업 반부패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코로나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반부패 노력이 한층 강화된 분위기이다⁵⁸. 중국정부의 부패와 에너지 효율성 사이에 유의미한 반비례 상관관계가 파악되고 중국의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이 중국 에너지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나⁵⁹ 한편으로 정부주도의 강력한 권력집중, 국가통제 및 반부패 캠페인이 중국의 기업가정신과 생산성 향상 및 혁신을 억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⁶⁰.

57 UNGC 한국협회, Fair Player Club Compliance Package 아시아, 중국편 (2017).

58 아주경제, “中 에너지업계 겨논 반부패 사정 칼날…고위층 연쇄 낙마”, 2020.09.14, <https://www.ajunews.com/view/20200914134421699#PL2>.

59 Jie Liu et al., “Does Anti-Corruption Policy Influence Energy Efficiency in China?” *Frontiers in Energy Research* Volume 9 (2021): 634556; Jing Guo et al., “China’s anti-corruption shock and resource reallocation in the energy industry.” *Energy Economics* Volume 96 (2021): 105182.

60 The Guardian, “From economic miracle to mirage - will China’s GDP ever overtake the US?” 2021.12.28,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1/dec/28/from-economic-mirage-to-mirage-will-chinas-gdp-ever-overtake-the-us>; 주간조선, “중국 최대 리스크는 시진핑?2022 미·중 대결 전망”, 2022.01.10,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91100011&ctcd=C07>.

3. 국내 에너지 산업 반부패 동향

한국은 부패 관련 국제 지표의 꾸준한 개선을 토대로 반부패 노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 1월 25일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총 62점으로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18년도에 설정한 2022년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 도약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역대 최고 기록으로 지난 해보다 한 단계 오른 수치이며, 2017년 51위에서 19단계가 올라 지난 5년간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지수가 개선된 것이다⁶¹. 또한 한국은 최근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21년 공공청렴지수(IPI)평가에서 8.09점을 받아 역대 최고 순위인 총 114개국 중 18위를 기록하였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해 아시아에서 부패 통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SIA PACIFIC

KOREA, SOUTH


Score

62/100 [What does the CPI score m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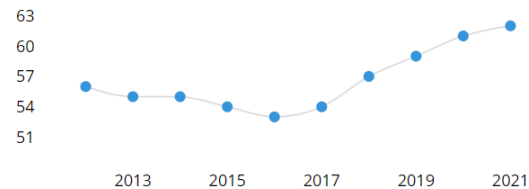
Rank

32/180

Score change

 **+1** since 2020

Score changes 2012 - 2021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국내의 대표적인 반부패 법 제정흐름을 살펴보면 1998년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은 해당 협약 가입에 따라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을 제정하여 해외 뇌물을 규제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UN반부패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을 제정하여 부패범죄의 효과적 방지 및 척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2000년에는 은행법 개정에 따라 준법감시제도가 처음 금융회사에 도입되었고, 2011년에 상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상장회사에도 준법감시제도가 의무화되었다. 한편 공직자를 대상으로는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가운데 관련법이 제정되어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적용 받고 있다. 2016년에는 기존 <공직자윤리법>에서 비롯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며 부정청탁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기 시작하였다. 2022년 5월부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해 부패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산업이 중요한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분야를 특정하여 적용하는 반부패 특별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EITI 미가입국이며, 채굴 산업 지분내역 공시제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이 EITI 이행국에서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현지에서 따르는 보고의무 절차 및 기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즉, EITI 기준이 국제적 규제 체제로서의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EITI 체제 확장은 국내 입법 노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⁶²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너지 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인 흐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대해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내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에너지 산업 내 투명성 증대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61 매일경제, "2021년 한국 부패인식지수 32위...OECD에서 가장 빠르게 향상," 2022.01.25, 현장뉴스.; "권익위, 문재인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 2018.04.18.

62 최철, "미국 Dodd-Frank 법과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 (2015).

한편 국내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는 2020년에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⁶³을 전수조사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60개의 사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권익위는 수의계약 전산 등록을 의무화할 것과 퇴직자가 임원 또는 대표인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할 것을 한국전력공사 등 16개의 공기업 및 지방공사에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에너지 분야 부패영향평가 주요 내용>⁶⁴

	현황	개선방안
수의계약	1. 소액 계약 전자조달시스템 미사용 및 자의적 분할 발주로 인한 수의계약 관리 미흡	1. 수의 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
	2.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 관련 회사와의 특혜적 수의계약 발생	2.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조항 마련
계약조건	3. 전자 인지세 부담 전가	3. 전자 인지세 공평 부담 방안 마련
	4. 비촉광물 공급업체에 대한 과도한 제재 규정 운영	4. 비촉광물 공급업체 제재규정 합리화로 업무 공정성 강화
	5.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지출 비용을 불인정할 소지	5.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 포함
계약절차	6. 검수관련 통제 미흡으로 불량자재 사용 우려	6. 검수에 대한 재량규정 통제 장치 마련
	7. 지원사업관련 특혜 및 재정누수 가능성 상존	7. 지원사업 시행의 공정성 확보 장치 마련
재량권 통제	8. 투자사업 중단에 관한 기관장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 상존	8. 투자사업 중단에 대한 기관장의 재량권 통제 장치 마련
	9.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과 대상 사업 간의 이해충돌상황 발생가능성 상존	9.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체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10. 투자심의 위원회 운영 투명성 미흡	10. 투자심의 위원회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
	11. 계약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수 부족으로 편법적인 운영 가능성 상존	11. 계약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수 확대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직원 복지	12. 정부과제 참여 연구원에게 객관적인 평가 없이 연구수당 지급	12. 정부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의 객관적 기준 마련
	13. 자체재산 임대료 면제 조항의 상위법령 위반 및 과도한 혜택 부여 가능성 상존	13. 자체재산 임대료 기준의 투명성 강화
	14. 잉여사택 관리 기준이 사업소마다 상이하여 불공정한 사택 운영 가능성 상존	14. 통일된 잉여사택 관리 기준 수립으로 제도운영 형평성 제고
	15.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 명목으로 심사로 부당 지급	15. 사내 회의참석시 각종 심의로 지급관행 개선
	16. 환차익 환수규정 미비로 재정누수 우려	16. 환차익 환수규정 신설로 재정누수 방지
	인사	17. 정부의 지시로 특별채용이 가능하여 특혜사비 발생 우려
18.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 승진 발령 후 징계로 편법적 인사운영		18.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 제한 도입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0

6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개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 서울특별시 소관 1개 지방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1개 지방공사의 2,277개 사규를 대상으로 점검 실시.

64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통해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 60개 사규 개선,” 2020.06.1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843>.

또한 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시행하며 이를 통해 각급 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오고 있다⁶⁵. 가장 최근 발표된(2022년 1월)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 KPS, 한국남동발전 등이 1등급을 기록하였다.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중 종합청렴도에서 총 1등급을 기록한 기관은 없었으나 2등급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 KDN, 한국원자력연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권익위는 기업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청렴윤리경영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하기 위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을 개발 중이다. 권익위는 국내외 문헌 분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토론회 등을 통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매뉴얼(세부 지침서) 초안을 개발했다. 여기에는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지표, 운영실적 심사기준, 평가/인증 등 운영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매뉴얼 배포에 앞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청렴윤리경영 업무협약을 맺은 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한 뒤 5월에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 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구성체계(안)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2b)

6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2022.01.18,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102&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89716>.

[Case Study] 에너지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부당수급 및
가짜정보를 활용한 부패행위 발생 통제



● 배경: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으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발전시장(RPS)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사용, 발전소 투자사기, 편법개발 등 보조금(공공)·발전시장(민간) 부패위험이 증가함. 따라서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발전시장(RPS) 운영 등은 한국에너지공단의 핵심 업무로 신재생에너지 부패취약분야의 제도개선이 시급해짐.

● 내용:

- 보조금 부정사용 제재 미흡, 가짜정보 유통 및 사후관리·규정 미비 등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발전시장(RPS)의 부패발생위험 요소로 분석함.

원인1:	원인2:	원인3:
보조금 부정사용 제재 미흡	태양광 가짜정보 유통	사후관리 및 규정 미비
시공기업의 불법 하도급, 명의로용 등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시행되지 않음	태양광 설비, 입지, 전력가격 등 일반인은 전문정보의 접근·획득이 어려워 가짜정보 범람	사후관리 미비로 본래용도가 아닌 건축물로 활용되는 태양광 발전소 운영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부당이득
수급자의 잘못된 인식 정착(참여제한, 환수조치 없는 사각지대 존재)	이에 따른 태양광 분야 허위·과장광고, 허위건축 분양사기 피해 증가	법·규정 미비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발전소 운영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부당이득

● 원인1 해결방안: 보조금 집행 실태조사 및 부정사용 강력 제재

보조금 투명 집행관리	- 피해접수 콜센터(1670-4270) 운영 -> 부정사례 적극 수집 -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 불법하도급 등 보조금 부정사용이 확인된 기업은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계약해지 및 고발·수사의뢰 조치 -> 강력제재
-------------	--

● 원인2 해결방안: 태양광 가짜정보 근절 및 전문 지원조직 신설

사기피해 예방	- 태양광 피해유형 분석 및 예방방법 개발 -> 정확한 정보제공 - 카드뉴스, 리플릿, 유튜브, 반사회보(행안부) 및 교육개설 - 신재생E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전국 12개 지역, 52명)
---------	--

● 원인3 해결방안: RPS 사후관리 강화 및 관련법령 규정 마련

발전시장 건전성 회복	- 발전소 사후관리 강화 및 건축물 REC 가중치 세분화 - 개발행위 준공필증 제출 의무화(RPS제도 개선) - 신규 사업자를 위해 입지·전력계통·일사량·경제성 분석 정보 등을 제공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원스톱 서비스 제공(ReCloud)
-------------	--

● 성과:

- 보조금 사용 실태조사 및 부정사용자 제재를 통해 보조금 관리 투명성 확보:
 - 피해접수 신고센터 운영으로 부정사용 수집 채널 구축
 - 보조금 사용자·시공기업 전수 실태조사(약 3만 개 소)로 보조금 집행 관리 모니터링 체계 마련
 - 부정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한, 협약 해지를 통해 일반시민의 부정사용 피해 예방, 의심기업은 고발조치로 민간분야 청렴의식 제고에 기여
- 가짜정보 근절, 전문조직 신설로 민간피해(생활적폐) 사전예방
 - 한국에너지공단이 직접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여 허위광고 등의 민간분야 피해예방에 기여
 - 종합지원센터는 일반 시민접점에서 보조금 신청, RPS컨설팅 지원으로 정보부족에 따른 부패위험 차단
- RPS 사후관리 강화 및 관련법령·규정 마련으로 기존 신재생사업자의 부당수익을 방지하고, 예비사업자의 사기피해 예방.
 - 태양광발전소 사후관리, 가중치 마련 및 개발행위 준공필승 제출 의무화 등 RPS 제도 개선 활동으로 사업자의 부당수익 비위 예방
 - 태양광 발전사업 원스톱서비스 제공(ReCloud)으로 발전사업 전주기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분양사기 등 예비사업자의 사기피해를 예방하고 태양광 발전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
-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공공기관 사칭, 무상설치를 약속하는 허위 과장광고 등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있었으나, 한국에너지공단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보조금·발전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개선사례는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 및 전파함.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1b)에서 재구성

[Case Study] 에너지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② 한국전력공사

시공우수 협력회사 선정 시 청렴성 평가



● 배경: 2014년부터 추진해온 송배전 시공우수 협력회사 선정 시 단순히 시공품질만 평가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이와 더불어 청렴도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2018년 8월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제도상의 허점 개선 및 공정사회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

● 내용:

- 과거 5년간 부정당업자로서 제제를 받았거나 계약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이력이 있는 회사의 경우 시공 우수 협력회사 선정에서 제외함
- 한전 자체 공사에 대한 제재사실 확인 및 전기공사협회를 통한 한전 이외의 공사에 대한 제재 사실까지 확인하여 실효성을 제고함.
- 2단계(1차 사업소 평가, 2차 본사 평가)평가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함.
- 협력회사 직원 대상 청렴윤리 교육 이수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한전 인재개발원에서 개발한 “청렴윤리 이터닝” 교육과정을 협력회사 직원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함.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시공우수 협력회사 평가 시 최대 10점의 가점을 줌(협력회사 직원 교육 가점 1인당 2점 부여).

● 성과: 부정당업자의 인센티브 수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여 부정부패 행위 발생을 근절하였으며, 협력회사 청렴의식 저변 확대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됨.

● 제안: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공공기관에서 시공우수 협력회사 선정 시 청렴도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한다면 민간 건설업체의 청렴도 동반 향상에 기여할 것임.

●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는 시공우수 협력회사로 선정될 수 없다는 조건에 대해 협력회사의 반발이 컸으나 청렴도 평가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함.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1b)에서 재구성

최근 ESG 경영의 부상에 힘입어 에너지 분야의 민간 부문에서도 반부패 및 윤리경영의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U를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많은 에너지 기업들도 공급망 내 반부패를 포함한 ESG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또한 많은 에너지 기업이 ISO 인증 및 컴플라이언스 절차 강화를 통해 기업 내 반부패 및 준법·윤리 경영을 내재화 및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Case Study] 최근 국내 에너지 기업의 반부패 노력 ① GS칼텍스

2021년 11월 국내 에너지업계 최초로 글로벌 인증기관으로부터 윤리경영 인증을 획득함.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로부터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인 ISO37301 준법경영시스템(Compliance Management System)* 인증을 받음. GS칼텍스



의 컴플라이언스팀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련 사전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총괄하는 부서로 2020년에 신설됨.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반독점 컴플라이언스책임(Anti-trust Compliance Officer, ACO)를 선임해 공정거래 관련 교육 및 구성원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전사 컴플라이언스 활동에 대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소통도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 반부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해오고 있음⁶⁶.

[Case Study] 최근 국내 에너지 기업의 반부패 노력 ② LG에너지솔루션

3대 사업분야로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은 2021년 11월 전세계 배터리업체 최초로 준법경영시스템 ISO37301을 획득함. 인증 획득에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를 높이기 위해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음.



LG에너지솔루션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뉴스레터 배포 등을 통한 준법인식 제고 및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음.⁶⁷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은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에서 2016년 10월 제정한 시스템. 모든 조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부패 분야에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규격으로, 조직에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에 대해 제3자인증이 가능한 글로벌 인증 제도임. 조직이 뇌물 및 부패 등과 관련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 타당하고 비례적인 정책, 절차 및 통제의 시행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규정.⁶⁸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Compliance management system)은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에서 2021년 4월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으로, 조직의 규모와 성격에 상관없이 해당 조직이 법률, 규정, 규범, 행동(윤리)강령 등 조직의 전략적 의무(obligation)들을 특정하고 그 의무들을 다하는 프로세스 결과물로서 제3자인증을 통해 해당조직의 경영시스템이 준법 경영임을 입증해주는 인증 제도.⁶⁹

66 헤럴드경제, "GS칼텍스, 에너지업계 최초 국제 윤리경영 인증," 2021.11.0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104000515>; GS칼텍스 미디어허브, "공정한 투명성을 앞세운 GS칼텍스 윤리경영, Compliance팀을 통해 알아보기" 2021.11.30, <https://gscaltexmediahub.com/story/gsc-compliance-team/>.

67 아시아투데이, "LG에너지솔루션, 'ESG위원회' 신설...위원장엔 신미남 사외이사," 2021.06.15,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15010008545>; 한경경제, "LG에너지솔루션, 업계 최초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인증," 2021.11.2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2260601>; 투데이코리아, "준법 경영 속도 내는 LG에너지솔루션, 국제 표준 획득," 2021.11.22,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551>.

68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n.d.) https://www.kcca.kr/sub2/2_1.php.

69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ISO 37301 (준법경영시스템)" (n.d.) https://www.kcca.kr/sub2/2_4.php.

제 4장. 기업 내 반부패 이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1. 부패 방지를 위한 통제 및 환경 조성
2. 부패 리스크 평가
3. 반부패 프로그램 이행
4. 반부패 프로그램 적용
5. 반부패 프로그램 모니터링

이번 장에서는 반부패 이행을 위한 6단계를 살펴보고, 각 단계별 이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⁷⁰



1. 부패 방지를 위한 통제 및 환경 조성

1) 고위 경영진의 지지와 선언

효과적인 반부패 프로그램은 오너, 최고경영자, 이사회 혹은 그에 준하는 기업 최고위급 경영진의 분명하고 공식적이며 강력한 지지와 선언이 있어야 한다. 임직원과 사업 파트너가 고위 경영진이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설계된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부패 위험 감소에 실패할 수 있다. 고위 경영진은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정책과 절차를 지원함과 동시에 부패에 관한 무관용 원칙을 도입할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이는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의 기본 가치에 기반을 둔 문화를 만드는 핵심 축이 된다.

체크리스트 1-1. 고위 경영진의 지지 및 선언

질문	O/X
고위 경영진이 기업의 반부패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하고 분명한 지지 및 선언을 보이고 있는가	
고위 경영진이 공식 선언문을 통해 부패 무관용 원칙을 공표하고 있는가	
고위 경영진이 부패 무관용 원칙을 지지하는 반부패 준법·윤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는가	
기업 전반에 걸쳐 고위 경영진의 선언이 이행되고 있는가	
고위 경영진이 반부패 준법·윤리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 및 관리감독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가	
고위 경영진이 반부패 프로그램 이행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인적 자원을 충분히 배정하고 있는가	
고위 경영진이 공시 및 자발적 이니셔티브 참여와 같은 반부패 프로그램의 범위와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가	
고위 경영진이 반부패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가 (예: 임직원 회의에서 프로그램의 당위성과 중요성 설명)	
기업에서 고위 경영진의 지지 및 선언을 공시하고 있는가	

7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Fair Player Club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2016)>를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발췌 요약.

2)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

고위 경영진의 부패 무관용 정책에 대한 분명한 지지와 선언은 반부패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어야 한다. 기업은 반부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에 반영하고 적용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1-2.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

질문	O/X
반부패 프로그램은 모든 준거법과 일관성이 있는가	
기업의 구체적인 필요사항이 반부패 프로그램에 잘 반영되었는가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키는 참여 방식을 기반으로 반부패 정책 및 절차를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가	
기업의 모든 분야, 업무, 직급에서 반부패 프로그램의 준법감시 이행이 의무인가	
반부패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및 프로그램 보충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반부패 프로그램 정책 및 절차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되어 있는가 (예: 약어 및 전문용어 사용 지양)	
반부패 프로그램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포용적인 사내문화 증진을 목표로 하는가	
반부패 프로그램이 모든 임직원 및 관련 사업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가	
반부패 프로그램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과 내부 지식공유에 따라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는가	
기업이 반부패 프로그램의 관리·감독에 대해 공시하고 있는가	

3) 명확하고 접근용이한 반부패 정책 수립

부패방지과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 및 감독에 대한 고위 경영진의 선언을 부패금지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의미가 명확하고 분명하며, 접근가능한 부패금지 정책은 반부패 프로그램의 운영기반이 된다. 이 정책은 모든 임직원과 관련 사업 파트너가 고수해야 할 원칙과 규칙을 명시하며, 기업이 부패방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준다.

체크리스트 1-3. 명확하고 접근용이한 반부패 정책

질문	O/X
반부패 정책이 (기업의 리스크 평가에 기반해서) 다양한 부패 현상을 다루고 있는가	
반부패 정책이 다양한 부패의 유형과 부패의 문제(예: 뇌물 강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반부패 정책이 모든 임직원 및 사업 파트너가 열람할 수 있도록 문서화되고 공시되어 있는가	
반부패 정책이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작성되었고 주요 사업장 현지언어로 번역되었는가	
반부패 정책이 실제 사례와 일반적인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반부패 정책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관할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반부패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고 있는가	
기업이 반부패 정책을 공시하고 있는가	

4) 준법·윤리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반부패 프로그램의 성패는 그에 대한 임직원과 사업 파트너의 지지에 달려 있다. 기업이 모범 기준에 따라 반부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행할 때 임직원과 사업 파트너가 기업의 가치 및 규범을 준수하도록 격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 문화에 따라 인센티브 제도를 하나의 옵션으로 도입할 수 있다. 인센티브는 임직원 및 주요 공급업체와 같은 사업 파트너를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업 파트너가 반부패 프로그램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하다.

체크리스트 1-4. 준법·윤리 증진 및 인센티브 제공

질문	O/X
준법·윤리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 모든 임직원과 사업 파트너가 포함되어 있는가	
인센티브 제도에 금전적 인센티브와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인센티브 제도가 임직원 및 관련 사업 파트너의 참여를 통해 수립되고 기업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가	
인센티브 제도가 현재 인사제도 및 성과 보상 절차에 통합되어 있는가	
성과 평가가 객관적이고 비교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개인적인 가치, 주관적 인상 혹은 가치관에 좌우되지 않는가	
직원들에게 반부패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관리자 혹은 감독자도 같은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는가	
인센티브 수령 대상이 개개인뿐 아니라 사내외 팀, 집단 혹은 부서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업무 능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준법·윤리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와 충돌하지 않는가	
인센티브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가	
평가 기준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모든 임직원 및 관련 사업 파트너에게 투명하게 적용되는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일반적인 문제(예: 주관적 평가, 기회의 불평등)를 다루고 있는가	
기업에서 준법·윤리 증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공시하고 있는가	

2. 부패리스크 평가


반부패 프로그램의 이행 및 관리는 부패 리스크 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부패 리스크는 기업 고유의 특징, 규모, 구조, 지리적 위치 혹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조달, 매출, 마케팅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한 가지의 반부패 프로그램은 없다. 각 기업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반부패 프로그램을 조정하여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부패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업의 부패 리스크

- **기업 특성:** 기업의 위치, 운영방식, 사업파트너와의 의사소통 방식, 기업 구조 등에 따라 앞서 언급된 결과가 미치는 영향도 달라짐
- **업종 및 지리적 위치:** 반부패 프로그램을 기업 상황에 맞게 조정할 때, 기업에서는 해당 업계와 지리적 위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산업과 지리적 위치는 기업이 운영하는 시장 역학 뿐만 아니라, 경쟁 수준, 시장 규범, 관습, 소비자, 공급자, 공무원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도 영향을 끼침
- **비즈니스 모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대리인이나 협력업체 같은 사업 파트너의 지원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경우 기업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낮으므로 부패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 **기업 구조:** 분권화된 기업의 경우 지사와 자회사의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약할 수 있음
- **기업 문화:** 경쟁이 과열되고, 신뢰도와 청렴성이 낮은 문화가 있는 기업의 경우 정직, 참여, 윤리적 가치가 강조되는 기업보다 부패에 더 취약함. 따라서 기업의 성과급 제도도 위험 평가에 포함되어야 함
- **기타:** 높은 이익률, 핵심 라이선스 의존도, 복잡한 계약 혹은 단기 금융 투자

[참고자료 소개] 반부패 리스크 평가 안내서 (2016)



- 발행기관: 유엔글로벌콤팩트 (UN Global Compact, UNGC)
- 내용: 반부패 리스크 평가를 위한 실용적인 단계별 가이드라인 제공, 반부패 리스크 평가의 6단계 (절차 수립, 리스크 식별, 리스크 평가, 리스크 완화 조치, 잔여 리스크 산정, 행동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
- 번역: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단계 1: 부패 리스크 식별

기업은 사업을 하는 국가의 국내법과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한다. 법률 조항과 규정 조치는 어떤 유형의 거래와 운영이 부패 위험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기업 운영 시 핵심 라이선스를 요구하면서 행정상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한 경우는 부패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적 요건과 각종 규제들은 법적 회색 지대가 어디인지, 기업이 어느 부분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애매한 활동을 피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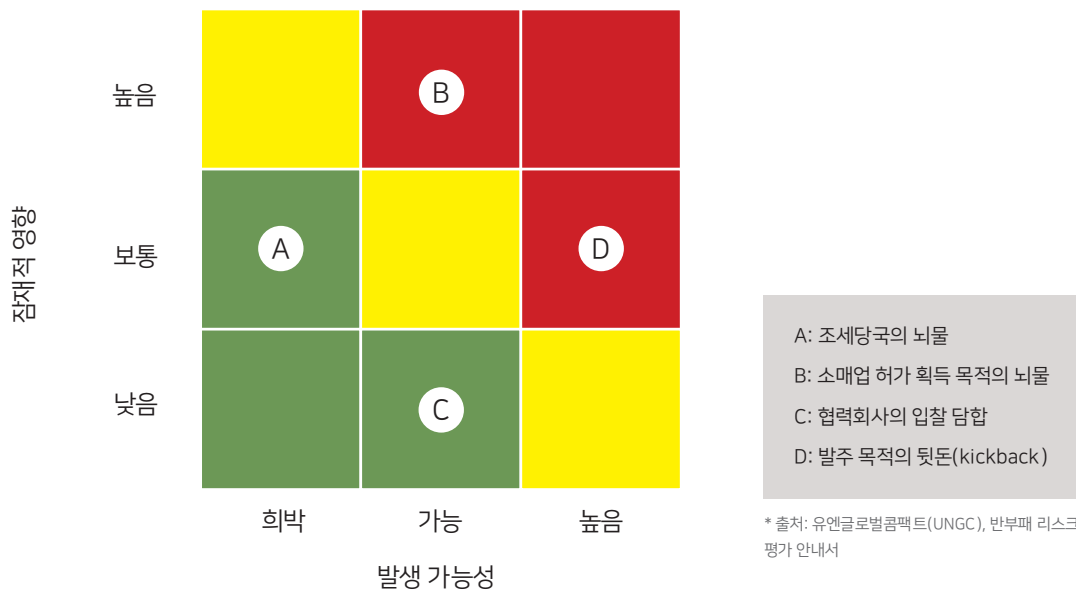
· 위험 신호(Red flag)

부패 리스크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다. 물론 기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리스크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리스크가 높은 영역과 잠재적인 위험 신호를 파악하는 것은 기업 내 부패 취약 영역을 발견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 이를 방지,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다. 부패 위험을 식별하는 과정에는 사내 임직원 간의 논의뿐 아니라 사업 파트너와 같은 이해관계자와의 논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임직원은 위험을 탐지하고 완화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또한, 과거 부패사태에 관한 정보는 부패발생 빈도와 발생 상황, 예방 기회를 보여준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 운영 지역 혹은 업계 내에서 다른 중소기업 혹은 상공회의소, 기업 협회, 노조와의 협력 하에 부패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부패 위험 감소 조치를 파악할 것을 권장한다.

단계 2: 부패 리스크 평가

기업에서는 다양한 부패 리스크에 따라 우선순위를 다르게 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고유 리스크를 양적·질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고유 리스크를 계량화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울 수 있지만 결과 보고를 촉진할 수 있다. 고유 리스크는 부패 발생 가능성과 부패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측정한다.

열지도(Heat Map) 예시



단계 3: 부패 리스크 완화

부패 리스크를 이상적으로 해결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며 부패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완화 조치를 통한 위험 감소를 시도해야 한다. 이하는 위험 완화 조치의 예이다.

- 외부 인사 고용 시 경영 관리감독 강화(예: 승인절차를 2명이 확인하는 원칙)
- 관세사의 뇌물 강요를 대비하여 물류사무원 대상 특별 교육
- 중간 관리직 참여 강화(예: 사내 행사에서 발언)
- 장기 계약이나 복잡한 계약의 경우 납부 자동화
- 주요 공급자 혹은 투자처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강화 및 공동 노력 이니셔티브에 참여

리스크 우선 순위 결정과 완화 조치 결정을 포함하여, 리스크 평가 결과는 양질의 평가와 후속 평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문서화 되어야 한다. 비록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완전히 다루지 못한 일부 부패 위험과 경미한 정도의 위험은 남겨놓을 수 있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상황과 이유를 문서화할 것을 권장한다.

체크리스트2. 부패리스크 평가

질문	O/X
기업이 정기적으로(최소 연 1회)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리스크 평가를 시행할 때 업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가	
리스크 평가를 시행할 때 운영 상 절차를 명시하고 이를 문서화 하였는가	
기업이 관리감독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가	
기업이 현재 절차에 리스크 평가를 포함시켰는가	
기업이 부패방지에 실패하였을 시 직면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법, 영업, 운영, 평판 상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리스크 평가에서 모든 위험 분야를 다루고 있는가(예: 업계 및 사업장 위치)	
기업의 내·외부 정보를 통해 부패 리스크를 식별하고 있는가	
기업이 전반적인 리스크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가	
기업이 전반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잔여 리스크를 파악하는 리스크 전략을 개발하고 있는가	
기업이 전반적인 리스크 평가 결과를 문서화 하고 있는가	
기업이 리스크 평가를 공시하고 있는가	

3. 반부패 프로그램 이행

1) 내부통제 및 기록 관리

기업은 모든 경영 활동, 특히 재무, 조달, 매출, 마케팅과 같이 리스크가 큰 부문에서 경영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보장할 의무가 있다. 기업은 업무 환경을 조성할 때 윤리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할 뿐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내부통제 시스템은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재무 보고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적용 가능한 법, 규제, 내부 정책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내부통제 시스템은 부패 리스크 완화 방안일 뿐만 아니라 기업 자산을 보호하고 임직원과 사업 파트너를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보호하는 경영진의 역할을 지원하는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체크리스트 3-1. 내부통제 및 기록 관리

질문	O/X
내부통제 시스템이 있는가	
내부통제 시스템의 목표가 임직원 및 사업 파트너에게 공유되고 있는가	
내부통제 시스템이 기업 각각의 리스크와 경영환경을 고려하고 있는가	
내부통제 시스템이 과도하거나 불충분한 통제가 없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	
내부통제 시스템이 조직 정책, 예방 및 탐지 통제로 구성되어 있는가	
내부통제 시스템이 핵심 경영 프로세스에 통합된 조직 정책에 포함되고 기업 전반 및 사업 파트너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기업 고위 경영진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설계, 이행, 관리하고 있는가	
사내 및 외부 감사가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평가하는가	
기업 이사진 혹은 그에 준하는 부서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있는가	
내부통제 시스템 구성 단계, 통제 시스템 담당자, 시스템 이행상황을 문서화 하고 있는가	
정확한 회계 장부 및 기록 관리를 위한 절차를 개괄적으로 설명한 공식 정책이 있는가	
내부통제 시스템과 회계 장부 보관을 공시하고 있는가	

[Case Study] - Royal Dutch Shell (영국)⁷¹



Shell은 오랫동안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Shell은 2003년 EITI의 창립 회원이 되었으며 같은 해에 나이지리아 정부에 납부한 세금, 로열티 및 기타 지불금을 발표한 최초의 회사이다. Shell은 2012년부터 자발적으로 세금 및 로열티 수익을 공개해왔다. 2016년부터 Shell은 영국 정부의 UK Reports on Payments to Governments Regulations 2014 (2015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정보 공개의 의무(mandatory disclosure)를 이행해왔다. 2019년 보고서에서는 28개국에서의 프로젝트별 세부적인 지불 내역이 포함됐다. 2018년에 Shell은 B Team Responsible Tax Working Group에서 개발한 B Team Responsible Tax Principles를 승인했고 2019년에 이러한 원칙을 자체적으로 채택했다. Shell은 또한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국가에서 Shell의 세금에 대해 쉽게 액세스할 수 있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세금 기여 보고서(Tax Contribution Report)를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71 EITI, "Royal Dutch Shell" (n.d.) <https://eiti.org/supporter/royal-dutch-shell>.

2) 소통과 교육

기업은 반부패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임직원과 사업 파트너에게 기업 정책 및 절차를 고지하고, 부패 문제 발생 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반부패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통과 교육이 중요하다.

기업의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서 표준화된 소통과 교육 활동을 통해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임직원과 사업 파트너에게 전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업에서는 구체적인 문제와 특정 집단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소통 및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현지의 반부패 혹은 정보보호 규정을 안내하고, 공급업체를 위해 실사 절차에 대한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소통과 교육은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고위험 부서를 대상으로만 진행할지에 대해 개별 위험도와 위험 허용치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임직원은 최소 연 1회 표준화된 의무교육에 참여하여 반부패 프로그램이 모든 임직원의 핵심 안건이 되도록 한다. 이 때 중간 관리자는 기업 교육과 소통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체크리스트 3-2. 소통과 교육

질문	O/X
소통과 교육 대상에 모든 임직원과 사업 파트너가 포함되었는가	
소통과 교육 과정이 내부 임용 및 외부 채용 절차에 포함되었는가	
소통과 교육이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는가	
소통과 교육이 리스크 평가 결과와 연계되어 있는가 (예: 정기소통 및 교육 자료 검토)	
소통과 교육 과정이 관련 임직원과 사업 파트너를 대상으로 반부패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소통과 교육과정이 웹사이트 게재, 이메일 발송, 뉴스레터 발간, 기업 사보 및 연례 보고서 발간과 같이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가	
맞춤형 소통과 교육에서 고위험군 산업 및 지역에서 근무하는 임직원과 사업 파트너의 문제와 수요를 다루고 있는가	
맞춤형 소통과 교육이 양방향적 소통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가 (예: 강의형 교육)	
소통과 교육을 문서화, 모니터링하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있는가	
특별상황 혹은 주요 행사(예: 조직 변동, 신규 지점, 자발적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반부패 프로그램의 중요성 및 목표를 강조하고 있는가	
기업은 소통과 교육 활동을 공시하고 있는가	

3) 위반 탐지 및 보고

최근 몇 년간 사업 파트너의 규정 위반에 따른 기업의 법률 및 평판 리스크가 증가해왔다. 위반의 방지·탐지·수사·처벌은 효과적인 반부패 준법·윤리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다. 위반사항의 탐지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은 임직원과 사업 파트너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당사자 혹은 제3자가 저지른 위반사항을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지침 제공과 정책 및 절차 지원은 준법 부서의 주요 업무가 되어야 한다.

체크리스트 3-3. 위반사항 탐지 및 보고

질문	O/X
기업 정책 및 절차의 해석과 이행을 돕는 전담 직원/부서 및 직통 전화에 언제든지 접근이 용이한가	
위반 사항을 탐지할 수 있는 사내·외 경로가 있는가	
기업이 제공하는 위반 사항 보고를 위한 직통 전화 혹은 옴부즈맨 서비스가 언제든지 쉽게 접근이 가능한가	
임직원 및 사업 파트너가 반부패 프로그램 위반사항을 보고하도록 격려하고 있는가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 혹은 양심에 따른 신고로 임직원이나 사업 파트너가 어떤 차별이나 해고도 당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고지하고 있는가	
신고자 및 신고 및 혐의 대상자가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보호받고,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가	
소통과 교육 과정에서 위반 사항 보고를 다루고 있는가	
고위 경영진이 위반사항 혹은 규정 외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가	
기업이 위반 사항 탐지 및 보고, 지침 모색에 관한 정책 및 절차를 공시하고 있는가	

[Case Study] Siemens (독일)⁷²



지멘스(Siemens)에는 “소 잃고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친” 뼈아픈 준법 사례가 있다. 지멘스의 현재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2006년 말 시작되었던 부정부패 사건73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개발되었다. 컴플라이언스 제도는 그 이전에도 회사에 존재하고 있었으나,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사업의 신규 수주 및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해외 공무원들과 고객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었고, 이는 1847년 지멘스 창립 이래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건으로 지멘스는 독일과 미국 당국과의 합의 및 독립적인 내부조사비용 등으로 총 22억 유로, 한화로 약 2조 6천 4백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다. 이후 지멘스가 도입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생존을 위한 강력한 조치인 셈이다. 새롭게 구축된 지멘스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미국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지침’에 상당 부분 기반을 두었다. 15년 동안 운영되어온 현재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그동안의 시장 상황, 사업 활동 및 규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직원들의 인식 수준에 맞게 진화해 왔다. 그런 가운데에도 변하지 않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효과적인 탐지 시스템을 들 수 있다. ‘Tell Us’는 내부고발 핫라인 시스템으로, 외부의 독립적인 서비스 업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익명성이 보장된다. 13개국의 언어로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 시스템의 링크는 지멘스의 인트라넷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어 지멘스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등 외부인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접수된 모든 신고는 조사전문가들이 신고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확인되는 즉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이 외에도, 외부의 법률 전문가 ‘Ombudsperson’을 고용하여 전문가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최근에는 직원들이 담당 준법지원인 또는 최고 준법지원인에게 직접 위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72 국민권익위원회, 윤리준법경영 브리프스 2021년 9월호, <https://www.acrc.go.kr/briefs/202109/index.html>)

73 New York Times, “At Siemens, Bribery Was Just a Line Item”, 2008.12.20, <https://www.nytimes.com/2008/12/21/business/worldbusiness/21siemens.html>.

4) 위반사항 해결

기업이 위반 사항이나 규정 외 관행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임직원과 사업 파트너의 반부패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결정된다. 효과적인 위반 사항 해결 절차는 법 집행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와 이미지 실추를 피할 수 있게 하므로, 위반 사항의 해결을 반부패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위반 사항이 탐지될 경우 기업은 부패 혐의를 탐지한 국가의 법 집행 관계자 뿐만 아니라 기업이 운영하는 다른 사법당국과도 협력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 3-4. 위반사항 해결

질문	O/X
임직원과 사업 파트너 대상 징계 정책이 명확하고 접근 용이한가	
징계 정책이 제재 목록, 절차와 업무에 대한 지침, 항소 기회를 포함하고 있는가	
사건과 관련 있고 적절한 제재 조치가 실제로 적용되는가	
사건 대응을 지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및 업무에 대한 지침이 있었는가	
위반사항에 연루된 내부 부서 혹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는 절차가 있는가	
반부패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반사항을 분석하는가	
기업 또는 임직원의 혐의가 제기되기 전에 잠재적 혹은 실제 위반사항에 관한 정보나 증거를 정부 당국에 사전에 공개하였는가	
기업 또는 임직원의 혐의가 제기된 이후 정부 당국과의 협력 의사를 밝혔는가	
정부 당국과의 협력을 고려할 때 국가 실정법 및 기소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는가	
정부 당국과의 협력 시 신고자, 증인, 전문가, 피해자의 보호를 논하였는가	
기업이 정보보호 규정에 대한 잠재적 위반사항을 논하고 있는가	
기업이 위반사항 해결과 정부 당국과의 협력에 관한 정책 및 절차를 공시하고 있는가	

5) 공동 노력

반부패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경영 환경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경쟁사들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수요측면)의 부패 강요 및 청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리스크는 중소기업은 물론 다국적기업에도 해당된다.

공동 노력은 같은 입장에 놓인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업들이 부패 발생 위험과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에 협력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기업의 영향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과 산업기관 간의 연대를 통해 공동 조치를 가능하게 하며, 반부패 정책 또는 현지법의 집행이 약한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노력은 단기 협약에서부터 장기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다양한 산업과 국가에서 전개될 수 있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 노력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민간 부문의 협력 (예: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공급 표준을 일치시키도록 요청함)
- 공공-민간 파트너십 (예: 급행료와 같은 개별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규제 또는 경영 환경 강화 지지)

이 과정에서 정부 및 국제기구, 산업협회는 해당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참고자료 소개]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 (2021)⁷⁴



- 발행기관: 유엔글로벌콤팩트 (UN Global Compact, UNGC)
- 내용: 공동노력을 위한 6단계 접근법과 절차 전반의 심층 분석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의 지역 부패 환경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잠재적인 기업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궁극적으로 글로벌콤팩트 지역 네트워크, 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공동노력의 이해와 활용을 주류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준비 (Prepare)

공동노력 이니셔티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세스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고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부패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및 법적 고려 사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준비과정 전반에 걸쳐 유용할 것이다. 독자들은 사실 공동노력이 표적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 구성요소들을 분석하고, 향후 활동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질문을 묻고 답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 첫번째 단계의 목표이다.

소개 (Introduce)

준비과정 후 다음 단계는 공동노력을 외부에 소개하는 것이다. 본 단계는 공동노력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잠재적 참가자들에게 공동노력을 숙지시켜 이해관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경험하게 될 절차 및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이해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후속 워크숍은 공동노력을 통해 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두 활동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는 것이 공동노력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이 첫 번째 일련의 회의에 참여함에 따라 진행자는 이해관계자 간의 건설적인 합의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소개 세션을 통해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구체화된다.

설계 (Develop)

다음 단계는 설계이다. 설계의 목표는 (1)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공동노력 이니셔티브를 식별하고, (2) 어떤 옵션을 수행할 것인지 우선 순위를 정하며, (3) 가장 큰 영향을 보장하기 위해 구조를 설계하는 일련의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이다. 이때 모니터링, 평가 및 집행 메커니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실행(Implement) 공동노력을 설계하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작성한 후,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는 것이 다음 단계이다. 실행은 공동노력의 유형, 규모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외부 자금을 확보하거나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주요 활동은 모니터링 및 집행 메커니즘 설정, 가치사슬에 속한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교육, 모범사례 공유 등이 포함된다.

평가 (Evaluate)

모니터링 및 평가는 진행 상황을 추적할 뿐 아니라 장단기 변화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공동노력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강력한 영향평가를 위해 공동노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로젝트 실행을 추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할 뿐 아니라 공동노력 참가자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와 영향을 창출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와 공동노력이 창출하고자 하는 각각의 변화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확장 (Scale & Sust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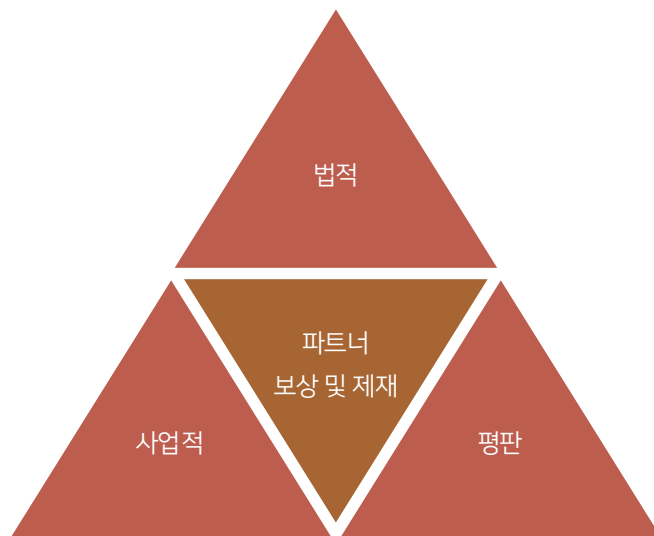
본 이니셔티브의 구조와 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또는 자문위원회의 주도가 필요하다. 공동노력은 이미 서로를 알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신뢰를 공유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기업인들로 구성된 초기 그룹으로 시작하여 보다 편안하게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 이니셔티브가 성숙기에 도달하면 회원 구성을 넓히고 추가 기업(지방기업 및 중소기업)은 물론 NGO, 공공기관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

74 Business Integrity Society 웹사이트: www.bis.or.kr.

4. 반부패 프로그램 적용

1) 사업 파트너 리스크 관리

기업은 복잡한 경영 환경 하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다. 이들과의 접촉은 경영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부패 리스크 또한 상당수준 높아진다. 사업 파트너와 함께 일하는 기업이 낮은 수준의 반부패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패 의혹을 받거나 사업 파트너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점점 더 많은 국가의 국내법에서 기업이 사업 파트너의 부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패한 사업 파트너와 연루된 기업은 이미지가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사업 파트너 선정과 사업 관계 유지에 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해야 한다.



	제재 조치	인센티브
사업적 측면	- 거래중단 - 사업기회 배제 - 불리한 계약 조건	- 사업 기회 증가 - 우호적 계약 조건
내부 조사	- 벌금 - 피해보상 - 형사처벌	- 제재 완화 가능
독립 평가 및 진단	- 부패관련 사건 공표로 인한 평판 하락 (*주로 시민사회 단체를 통해 공개됨)	- 반부패 우수 이행 기업으로 이미지 제고

2) 실사⁷⁵

기업은 사업 관계를 맺기 전 실사 단계를 밟는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반부패 실사는 사업 파트너가 기업의 반부패 정책에 따라 행동하는지 확인하는 연구, 조사, 평가, 모니터링 절차이다.

실사 범위와 수준은 부패에 취약한 국가로 파견된 모든 사람에 대한 의무 실사에서부터, 사업 유지에 핵심적인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실사까지 다양하다. 실사는 기업이 직접 실시하거나 외부 컨설턴트를 통해 실시, 또는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실사 과정에서 사업 파트너의 역량을 확인하고 반부패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외국 공무원 출신 이사, '그림자 이사(shadow director)' 혹은 과거 뇌물수수 전력과 같은 '경고 신호'의 의무도 확인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4. 사업 파트너의 반부패 프로그램 적용

질문	O/X
모든 사업 파트너가 기업의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가	
모회사에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회사에 모회사 수준의 반부패 프로그램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가	
계열사에 미처 다루지 않은 부패 리스크 완화 방안과 본사에 준하는 수준의 반부패 프로그램 도입을 독려하고 있는가	
합작투자사에 자사 혹은 그에 준하는 반부패 기준 준수와 부패 리스크 완화 방안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중개인 및 중개업체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절차를 따르고 있는가	
계약업체 및 공급업체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절차를 따르고 있는가	
신규 사업 파트너 선정 시 실사를 거치는가	
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 평가 및 사업 파트너와 관련된 구체적인 리스크 분야를 고려하여 실사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하는가	
사업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의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모니터링 범위, 빈도, 시행 방식을 결정하는가	
사업 파트너에게 기업의 반부패 기준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법적, 경제적, 평판 측면의 인센티브와 제재조치가 있는가	
사업 파트너의 반부패 프로그램 적용 결과를 공시하고 있는가	

[Case Study] Gunvor (스위스)



건보(Gunvor)가 2009년과 2011년 사이 직원과 대리인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 콩고-브라자빌과 아이보리코스트에서 석유 거래를 성사시켰다. 2010년 6월 콩고 국영 석유 회사 SNPC로부터 3년 석유 공급 계약을 확보했으며 2011년 7월에 SNPC와 총 6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석유 화물에 대한 2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아이보리코스트로부터 석유 화물을 받아들였다. 2018년 외국 뇌물 혐의로 기소된 건보 직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전직 회사 직원과 금융 중개인이 외국 뇌물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⁷⁶ 조사 결과 건보는 비즈니스 활동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도 없었으며 스위스 검찰총장은 건보가 해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직적 조치"를 모두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⁷⁷ 콩고 사건이 있은 후 Gunvor는 에이전트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 Gunvor는 이미 2018년부터 에이전트 수를 약 45% 줄여왔었고 이제 전면적으로 없앨 것이라 밝혔다.⁷⁸

75 실사(Due Diligence)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의미함.

76 Transparency International, Exporting Corruption: Progress report 2020: Assessing enforcement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2020), p.113.p

77 Reuters, "Gunvor must pay \$95 million for Congo oil corruption: Swiss prosecutors," 2019.10.17, <https://www.reuters.com/article/us-gunvor-grp-congo-corruption-idUSKBN1WW0Z9>; Financial Times, "Gunvor pays almost \$100m to settle Africa corruption case", 2019.10.17, <https://www.ft.com/content/0d808564-f0c0-11e9-bfa4-b25f11f42901>;

78 Financial Times, "Gunvor to end use of agents to win business," 2020.11.18, <https://www.ft.com/content/f51b9963-d592-45fd-a903-6ef2e020704b>; Gunvor, "Gunvor to Cease Use of "Agents"," 2020.11.18, <https://gunvorgroup.com/news/gunvor-to-cess-use-of-agents/>.

5. 반부패 프로그램 모니터링

1) 관리감독

반부패 프로그램의 관리 감독에 관한 업무는 이사회 혹은 그에 준하는 사내 부서에서 결정하며, 이사회에서는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준법감시, 감사, 윤리 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이행 및 실행에 관한 책임은 기업의 고위 경영진에게 있다. 경영진은 정책과 절차가 일일 단위로 적용되고 있는지와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기준치에 따라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진은 이사회 혹은 그에 준하는 부서에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대기업에서는 고위 경영진이 준법가시팀 혹은 법무팀과 같은 독립적인 사내 부서를 신설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프로그램의 이행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상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 부서는 내부 갈등을 피하는 방법(예: '임직원 번호'와 '혐의 조사' 업무를 분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반부패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대해 문서를 수집하고 이를 고위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한다.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이행, 실행, 관리, 감독 업무가 각기 다른 직급과 부서(예: 사업 부서와 지역별 부서)에 배정될 수 있다.

2) 정기 검토 및 평가

검토는 각종 정보의 취합과 반부패 프로그램 각 요소에 대한 분석으로 진행하며, 프로그램 주기와 별개로 진행된다. 평가는 검토 결과의 분석이며,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조정과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기 위한 분명한 평가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평가는 기업의 자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효과성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정기 검토 및 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반부패 정책 혹은 절차에 대한 조정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프로그램 조정에는 새로운 방안 도입, 기존 방안 보충, 비효율성 개선 혹은 전략 활용이 포함될 수 있다.

체크리스트 5. 반부패 프로그램의 정기 검토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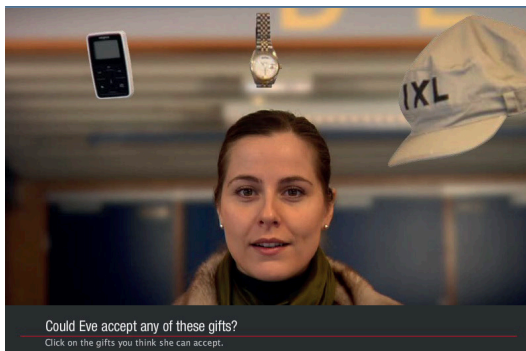
질문	O/X
고위 경영진이 반부패 프로그램의 정기검토를 시행하고 최적의 시정 조치를 결정하는가	
프로그램 검토 과정에서 경영환경 발전과 내부 운영을 통한 지식공유를 반영하고 있는가	
사내·외 감사 결과, 내부통제, 모니터링, 피드백, 평가 및 기준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검토를 실시하는가	
프로그램 평가가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이라는 세가지 기준을 토대로 하는가	
프로그램의 검토 및 평가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개선의 여지를 정하고 있는가	
검토 및 평가 결과(개선여지 포함)를 임직원과 사업 파트너에게 공유하고 있는가	
이사진 혹은 그에 준하는 부서(예: 감사위원회)에서 고위 경영진의 반부패 프로그램 시정 조치를 평가 및 승인하고 정해진 주기별 검토 및 평가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기업에서 반부패 프로그램의 검토 및 평가를 외부 공시하고 있는가	

부록: Tools and Resources

1. 온라인 학습 툴 (E-learning tool: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공동으로 개발한 반부패 온라인 학습 툴은 총 6개 모듈로 구성되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번째 원칙과 유엔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대한 기업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자세한 강의 내용은 <http://thefightagainstcorruption.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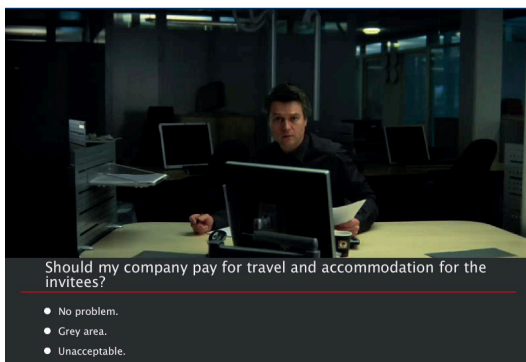
제 1강. 달갑지 않은 선물 - 선물 및 접대 수락

개요

- 뇌물에 해당하는 선물의 범위
- 여행 경비 제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용

- 직원들은 기업 로고가 새겨진 판촉물 외 선물을 받지 않아야 함
- 여행 및 숙박 경비를 항상 기업에서 부담해야 함
- 직원들은 선물, 접대 등의 수락에 대해 반드시 상관에게 보고해야 함



제 2강. 행사 준비 - 선물 및 접대 제공

개요

- 접대 제공이 정당화되는 경우
- 위험 신호(red flags)의 정의
- 공무원 접대 시 유의할 사항

내용

- 행동강령에 직원들이 과도한 선물 혹은 기타 혜택을 수락해서는 안됨을 명시해야 함
- 공무원 또는 사업 파트너에게 여행 및 숙박 경비를 제공하지 않아야 함
- 특별한 상황 하에서는 내부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의 여행 및 숙박 경비 지불 가능
- 공무원을 상대할 경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제 3강. 지불할 것인가 말 것인가 - 급행료와 부패

개요

- 급행료의 정의
- 급행료 요구를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

내용

- 유엔반부패협약은 급행료를 금지함
- 급행료의 제공 혹은 요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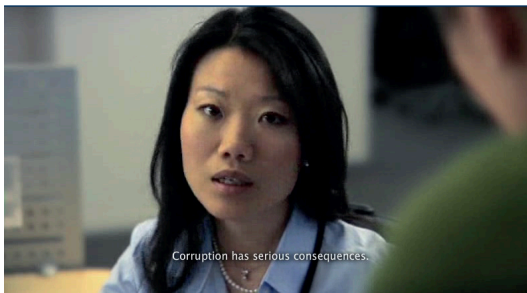


제 4강. 미스터리한 중개인 - 중개인 및 로비스트의 고용 개요

- 중개인 고용 시 주의할 점
- 사내 윤리 규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유엔반부패협약은 '영향력에 의한 거래'를 금지함
- 비즈니스 관계는 청렴성 실사(due diligence)가 시행된 후에 수립 혹은 변경되어야 함
- 중개인과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국내법 및 기업의 행동강령 상의 요건과 부합해야 함
- 윤리적 우려 혹은 규정 위반을 발견한 경우, 적절한 직급의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거나 기업 내 상담 전화를 통해 이를 상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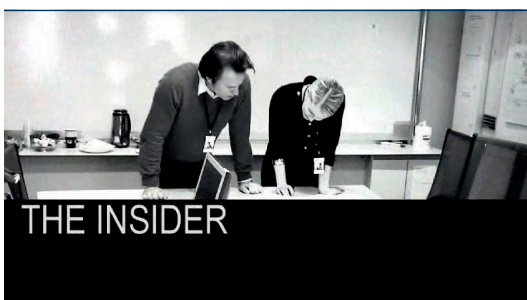
제 5강. 수상한 편지 - 부패와 사회 기부

개요

- 외국 공무원 대처 관련 사항
- 사회 기부가 뇌물에 해당되는 경우

내용

- 유엔반부패협약에 의하면 가족 혹은 공무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부패 행위에 해당함
- 수혜자 혹은 주요 입찰 의사 결정자와 관계된 자에게 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공무원을 상대할 경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제6강. 내부자 - 내부 정보

개요

- 부당한 내부 정보 거래
- 이해 상충

내용

- 내부 정보란 공적으로 접할 수 없거나 시장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증권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뜻함
- 증권 매매 신청 혹은 거래를 위해 내부 정보를 직·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함

2. 반부패 관련 주요 자료

(Key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Combating Corruption)

▶ FAIR PLAYER CLUB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



발행기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내용: 국내외 주요 반부패법 및 협약을 포함해 강화되는 반부패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으로, 대기업 또는 리스크가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FAIR PLAYER CLUB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



발행기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내용: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가지고도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단계별 이행방안을 제시

▶ A Guide for Anti-Corruption Risk Assessment(반부패 리스크 평가 안내서)



발행 기관: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

내용: 반부패 리스크 평가를 위한 실용적인 단계별 가이드라인 제공. 반부패 리스크 평가의 6단계(절차 수립, 리스크 식별, 리스크 평가, 리스크 완화 조치, 잔여 리스크 산정, 행동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

번역: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http://www.unglobalcompact.kr>)

▶ Reporting Guidance on the 10th Principle against Corruption(10번째 원칙 보고지침)



발행 기관: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내용: 기업이 반부패 관련 정책 및 행동을 철저히 하고 효과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 제시

번역: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http://www.unglobalcompact.kr>)

▶ A Practical Guide for Collective Action against Corruption



발행 기관: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

내용: 전세계의 다양한 공동 노력(Collective Action) 프로젝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반부패 공동 행동 이니셔티브 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 Stand Together against Corruption



발행 기관: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

내용: 기업의 공급망 반부패 관리를 위한 간결하고 실용적인 가이드라인 및 기업 사례 제시

▶ Managing Third Party Risk (제3자 리스크 관리)



발행기관: 영국투명성기구, 미국투명성기구 공동집필

내용: 제3자를 어떻게 선택,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것인지를 기업 내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제3자 뇌물방지 체계 확립, 현행 공시, 문서화 및 새로운 기술 등을 통한 정보관리의 순으로 설명, 제3자 부패방지 관리에 필요한 11가지 원칙과 모범 이행 방안을 제시

번역: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번역

▶ INCENTIVISING ETHICS: 비윤리적 행위 방지 및 올바른 행동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관리



발행기관: 영국투명성기구

내용: 업무 실적에 대한 압박 속에서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가 자칫 부패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서술하고, 이러한 인센티브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인센티브 제도가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순기능을 하기 위해 기업이 지켜야 하는 14개 핵심 원칙을 제안

번역: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Make it Count:기업 반부패 접근법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최근 동향



발행기관: 영국투명성기구

내용: 반부패의 핵심 4가지 영역인 최고 경영진의 지지, 리스크 평가, 제3자 관리,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기업의 반부패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제시

번역: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ICC Anti-Corruption Third Party Due Diligence: A Guide for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발행 기관: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내용: 중소기업들이 실사(due diligence)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

▶ ICC Rules on Combating Corruption



발행 기관: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내용: ICC의 반부패 관련 작업에 있어 초석이 되는 규칙으로, 기업의 내부 규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정부 역시 부당취득 및 뇌물수수 퇴치 지침으로 사용 가능

▶ Transparency in Corporate Reporting



발행 기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내용: 전세계 124개 대기업의 투명성 평가. 기업의 반부패 프로그램, 조직 투명성, 국가별 보고, 세 가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자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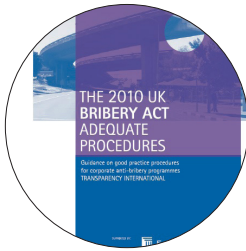
▶ Diagnosing Bribery Risk



발행 기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내용: 효과적인 리스크 평가 시행 사례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 제공

▶ The 2010 UK Bribery Act Adequate Procedures



발행 기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내용: 뇌물방지 시스템 모범사례에 관한 명확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영국 뇌물수수법을 준수하도록 지원

체크리스트 번역: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http://www.unglobalcompact.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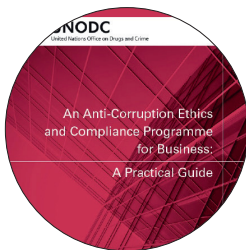
▶ Anti-Corruption Ethics and Compliance Handbook for Business



발행 기관: OECD, UNODC, World Bank

내용: 국제 반부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유용하고 실용적인 툴 제공. 국제 반부패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 실제 기업 사례 제공

▶ An Anti-Corruption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 for Business: A Practical Guide



발행 기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내용: 유엔반부패협약(UNCAC), 글로벌 반부패 이니셔티브 등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 및 기회를 제시하고,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부패방지, 준법감시 프로그램 개발을 돕는 실용적인 가이드

▶ B20-G20 Anti-corruption Toolkit for SMEs



발행 기관: G20 반부패 워킹그룹

내용: G20 회원국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지침서로 중소기업의 리스크 영역 및 대응방안, 국가별 부패방지 법규를 제시

참고문헌

<영문>

ACE SOAS Consortium. (n.d.). "What opportunities are there for reducing corruption in climate finance and the energy transition?" <https://ace.soas.ac.uk/what-opportunities-are-there-for-reducing-corruption-in-climate-finance-and-energy-transition/>.

Aljazeera. 2021. "Suit claims BP trader sacked for raising Nigeria bribe concerns." 20 September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1/9/20/suit-claims-bp-trader-sacked-for-raising-nigeria-bribe-concerns>.

Anderson, Jim. 2021. "To tackle climate change, take on corruption." World Bank Blog. 22 November <https://blogs.worldbank.org/climatechange/tackle-climate-change-take-corruption>.

Bloomberg. 2021. "BP Oil Trader Says He Was Fired Over Nigeria Bribe Concerns." 20 September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9-20/ex-bp-oil-trader-says-he-was-fired-over-nigeria-bribe-concerns>.

BP. 2021.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London. 70th edition.

EITI. 2020. "EITI Global Factsheet" <https://eiti.org/document/eiti-factsheet>.

EITI. (n.d.). "Countries" <https://eiti.org/countries>.

EITI. (n.d.). "Kosmos Energy" <https://eiti.org/supporter/kosmos-energy>.

EITI. (n.d.). "Supporters" <https://eiti.org/supporters>.

EITI. (n.d.). "Royal Dutch Shell" <https://eiti.org/supporter/royal-dutch-shell>.

ESMAP. 2021. Energy Sector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 (ESMAP) Annual Report 2021 (English). ESMAP Annual Report. Washington, D.C.: World Bank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615511640189474271/Energy-Sector-Management-Assistance-Program-ESMAP-Annual-Report-2021>.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n.d.). "What is a just transition?" <https://www.ebrd.com/what-we-do/just-transition>.

European Commission. 2022. "EU Taxonomy: Commission presents 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 to accelerate decarbonisation." 2 February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11.

European Union. 2018. Review of country-by-country reporting requirements for extractive and logging industries: Final report.

Financial Times. 2019. "Gunvor pays almost \$100m to settle Africa corruption case." 17 October <https://www.ft.com/content/0d808564-f0c0-11e9-bfa4-b25f11f42901>.

Financial Times. 2020. "Gunvor to end use of agents to win business." 18 November <https://www.ft.com/content/f51b9963-d592-45fd-a903-6ef2e020704b>.

Gokce, Mete. 2018. "What the extractives sector can teach renewables on curbing corruption." EITI Secretariat. <https://eiti.org/ru/node/10070>.

Grasso, Costantino. 2017. "The Dark Side of Power: Corruption and Bribery within the Energy Sector", in Rafael Leal-Arcas and Jan Wouters (eds.), Research Handbook on EU Energy Law and Policy. Edward Elgar Publishing.

Grasso, Costantino. 2020. "The troubled path towards greater transparency as a means to foster good corporate governance and fight against corruption in the energy sector" in Stephane Goutte and Duc Khuong Nguyen (eds.)

Handbook of Energy Finance Theories: Practices and Simulations. World Scientific.

Gray, Sidney J., Niclas Hellman and Mariya N.Ivanova. 2019. "Extractive Industries Reporting: A Review of Accounting Challenges and the Research Literature." Abacus (Sydney) Volume 55 Issue 1: 42-91.

Gunvor. 2020. "Gunvor to Cease Use of "Agents"." 18 November
<https://gunvorgroup.com/news/gunvor-to-cease-use-of-agents/>.

Guo, Jing, Yanan Wang and Wei Yang. 2021. "China's anti-corruption shock and resource reallocation in the energy industry." Energy Economics 96: 105182.

<국문>

국민권익위원회. 2020. "부패영향평가' 통해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 60개 사규 개선." 6월 10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843>.

국민권익위원회. 2021a. "국민권익위,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12월 9일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89406>

국민권익위원회. 2021b. 문재인 정부 4년간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100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2397>.

국민권익위원회. 2021c. 윤리준법경영 브리프스 2021년 8월호. https://www.acrc.go.kr/briefs/202108/sub_14.html.

국민권익위원회. 2021d. 윤리준법경영 브리프스 2021년 9월호. <https://www.acrc.go.kr/briefs/202109/index.html>.

국민권익위원회. 2022a. "국민권익위,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1월 18일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102&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89716>.

국민권익위원회. 2022b.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확산 위해 전문가와 협약기관 의견 수렴에 나서". 2022년 2월 24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37944&tag=&nPage=1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n.d.). "에너지산업"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25022&cid=40942&categoryId=31898>.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n.d.). "1차 에너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6787&cid=40942&categoryId=31868>.

매일경제. 2022. "2021년 한국 부패인식지수 32위...OECD에서 가장 빠르게 향상." 1월 25일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1/74665/>.

박상희. 2016. 채굴산업 가치사슬에서의 부패. 주오이시디대표부.

스포츠조선. 2021. "'ESG 경영' 역행,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 대상 기업 중 36% '외면.'" 12월 1일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12020100007620000200&servicedate=20211201>.

아시아투데이. 2021. "LG에너지솔루션, 'ESG위원회' 신설...위원장엔 신미남 사외이사." 6월 15일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15010008545>.

아주경제. 2020. "중 에너지업계 겨누 반부패 사정 칼날...고위층 연쇄 낙마." 9월 14일
<https://www.ajunews.com/view/20200914134421699#PL2>.

위키백과. (n.d.). "에너지 산업"
https://ko.wikipedia.org/wiki/%EC%97%90%EB%84%88%EC%A7%80_%EC%82%B0%EC%97%85.

일요경제. 2021. "[2021 국감] 에너지공기업, 녹색채권 발행 그린워싱으로 약용." 10월 12일
<http://www.ilyoec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6338>.

정책위키. 2020. "에너지전환정책." 3월 11일 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795.

주간조선. 2022. "중국 최대 리스크는 시진핑? 2022 미·중 대결 전망." 1월 10일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91100011&ctcd=C07>.

중앙일보. 2022. "[시론] 준법감시제도는 기업 리스크 막는 백신." 1월 5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64293?sid=110>.

초이스경제. 2019. "英 페트로팩 수주 뇌물 혐의, 국내 건설사에 호재될 듯"...홍국증권." 2월 8일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55>.

최철. 2015. 미국 Dodd-Frank 법과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가 해외 자원개발 산업에 갖는 함의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39권 2호: 1-17.

포스코뉴스룸. 2021. "포스코, 국내 기업 최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 제도' 시행." 1월 12일
<https://newsroom.posco.com/kr/%ED%8F%AC%EC%8A%A4%EC%BD%94-%EA%B5%AD%EB%82%B4%EA%B8%B0%EC%97%85-%EC%B5%9C%EC%B4%88-%EA%B3%B5%EC%A0%95%EA%B1%B0%EB%9E%98-%EC%9E%90%EC%9C%A8%EC%A4%80%EC%88%98-%ED%94%84%EB%A1%9C%EA%B7%B8/>.

한경경제. 2021. "LG에너지솔루션, 업계 최초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인증." 11월 23일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2260601>.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2. KSGS 리포트 11권 12호.

한국에너지공단. 2021. 2021년 에너지 첫걸음.

한국은행. 2021.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최근 상황 점검. 국제경제리뷰 2021-26,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1-44호.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28/view.do?nttlId=10067538&menuNo=200434&pageIndex=1>.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n.d.).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https://www.kcca.kr/sub2/2_1.php.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n.d.). "ISO 37301 (준법경영시스템)." https://www.kcca.kr/sub2/2_4.php.

현장뉴스. 2018. "권익위, 문재인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 4월 18일
<http://www.fiel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83>.

헤럴드경제. 2021. "GS칼텍스, 에너지업계 최초 국제 윤리경영 인증." 11월 4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104000515>.

환경부. 202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투데이코리아. 2021. "준법 경영 속도 내는 LG에너지솔루션, 국제 표준 획득." 11월 22일.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551>.

CNB뉴스. 2021. "남동발전, ESG경영 강화... 준법·반부패경영 인증 취득." 11월 22일
<https://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520072>.

GS칼텍스 미디어허브. 2021. "공정한 투명성을 앞세운 GS칼텍스 윤리경영, Compliance팀을 통해 알아보기!" 11월 30일
<https://gscaltexmediahub.com/story/gsc-compliance-team/>.

UNGC 한국협회. 2016a. Fair Player Club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

UNGC 한국협회. 2016b. Fair Player Club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

UNGC 한국협회. 2017a. Fair Player Club Compliance Package – 아시아, 중국편.

UNGC 한국협회. 2017b. Fair Player Club Compliance Package – 유럽편.

UNGC 한국협회. 2019.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기회와 우수사례.

UNGC 한국협회, KOSIF. 2020. Business Integrity Society 반부패 정책 브리프.

<웹사이트>

대한민국 통계청: kostat-sdg-kor.github.io.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https://energium.kier.re.kr/sub02020101>

대한석유협회: http://www.petroleum.or.kr/ko/industry_new/industry1.php

Business Integrity Society: www.bis.or.kr

Our World in Data: ourworldindata.org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21/index/kor>

World Bank ESMAP: trackingsdg7.esmap.org/about-us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Tel. +82 2 749 2149/50
Fax. +82 749 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Web. www.unglobalcompact.kr